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공약 모음집

본 내용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유권자에게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선택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감 없이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http://www.nec.go.kr:8088/3pweb>)에 게시·공개된 내용을 모아 책자로 발간한 것입니다.

Chapter 1	정책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1
	I. 경제·민생분야 ... 3 / II. 사회·복지분야 ... 4 III. 교육·환경분야 ... 5 / IV. 정치·행정분야 ... 6 V. 외교·안보분야 ... 7	
Chapter 2	정책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이유	9
	I. 경제·민생분야 ... 11 / II. 사회·복지분야 ... 20 III. 교육·환경분야 ... 28 / IV. 정치·행정분야 ... 37 V. 외교·안보분야 ... 46	
Chapter 3	정당의 10대 기본정책	55
	통합민주당 I. 경제·민생분야 ... 63 / II. 사회·복지분야 ... 65 III. 교육·환경분야 ... 67 / IV. 정치·행정분야 ... 69 V. 외교·안보분야 ... 71	
	한 나라 당 I. 경제·민생분야 ... 73 / II. 사회·복지분야 ... 75 III. 교육·환경분야 ... 77 / IV. 정치·행정분야 ... 80 V. 외교·안보분야 ... 82	
	자유선진당 I. 경제·민생분야 ... 85 / II. 사회·복지분야 ... 86 III. 교육·환경분야 ... 87 / IV. 정치·행정분야 ... 88 V. 외교·안보분야 ... 90	
	민주노동당 I. 경제·민생분야 ... 92 / II. 사회·복지분야 ... 94 III. 교육·환경분야 ... 96 / IV. 정치·행정분야 ... 98 V. 외교·안보분야 ... 99	
	창조한국당 I. 경제·민생분야 ... 102 / II. 사회·복지분야 ... 104 III. 교육·환경분야 ... 105 / IV. 정치·행정분야 ... 107 V. 외교·안보분야 ... 109	

● **친 박 연 대**

- I. 경제·민생분야 ... 111 / II. 사회·복지분야 ... 112
- III. 교육·환경분야 ... 113 / IV. 정치·행정분야 ... 114
- V. 외교·안보분야 ... 115

Chapter 4 **정당의 10대 선거공약**

117

● **통합민주당**

- I. 경제·민생분야 ... 125 / II. 사회·복지분야 ... 127
- III. 교육·환경분야 ... 129 / IV. 정치·행정분야 ... 131
- V. 외교·안보분야 ... 133

● **한 나 라 당**

- I. 경제·민생분야 ... 135 / II. 사회·복지분야 ... 138
- III. 교육·환경분야 ... 140 / IV. 정치·행정분야 ... 143
- V. 외교·안보분야 ... 145

● **자유선진당**

- I. 경제·민생분야 ... 146 / II. 사회·복지분야 ... 147
- III. 교육·환경분야 ... 148 / IV. 정치·행정분야 ... 149
- V. 외교·안보분야 ... 150

● **민주노동당**

- I. 경제·민생분야 ... 152 / II. 사회·복지분야 ... 153
- III. 교육·환경분야 ... 155 / IV. 정치·행정분야 ... 156
- V. 외교·안보분야 ... 158

● **창조한국당**

- I. 경제·민생분야 ... 160 / II. 사회·복지분야 ... 162
- III. 교육·환경분야 ... 163 / IV. 정치·행정분야 ... 165
- V. 외교·안보분야 ... 167

● **친 박 연 대**

- I. 경제·민생분야 ... 169 / II. 사회·복지분야 ... 170
- III. 교육·환경분야 ... 172 / IV. 정치·행정분야 ... 173
- V. 외교·안보분야 ... 174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정책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I. 경제·민생분야

질문 내용	정당명	기본입장	비고
1. 기업의 은행소유는 현행대로 금지 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찬성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찬성	
	창조한국당	찬성	
	친박연대	조건부반대	
2.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기타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3.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찬성	
4. 수도권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반대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Ⅱ. 사회·복지분야

질문내용	정당명	기본입장	비고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성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찬성	
	창조한국당	찬성	
	친박연대	반대	
2.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3.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4.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반대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기타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찬성	

Ⅲ. 교육 · 환경분야

질문 내용	정당명	기본입장	비고
1.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설립하여야 한다.	통합 민주당	반대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찬성	
2.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3. 자가용 사용의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반대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찬성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반대	
4. 그린벨트는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반대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IV. 정치·행정분야

질문내용	정당명	기본입장	비고
1. 제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기타	
	한나라당	기타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찬성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찬성	
2.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반대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반대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찬성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성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찬성	
4.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창조한국당	찬성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V. 외교 · 안보분야

질문 내용	정당명	기본 입장	비고
1. 이라크 파병은 계속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반대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찬성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조건부반대	
	자유선진당	반대	
	민주노동당	찬성	
	창조한국당	찬성	
	친박연대	조건부반대	
3.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통합 민주당	반대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반대	
	친박연대	찬성	
4.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통합 민주당	조건부찬성	
	한나라당	찬성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친박연대	찬성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정책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이유

I. 경제 · 민생분야

1. 기업의 은행소유는 현행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성

- 은행은 신용창조, 효율적인 금융자원 배분, 성장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리스크분담, 중소기업 금융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예금자 보호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그러므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은행의 경영권을 소수 기업이 장악한다면 비효율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결국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는 내부거래에 대한 견제기능의 축소와 산업자본에 의한 시장 지배력 확대, 산업과 금융의 동반부실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은행경영권 장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됨
- 오히려 기업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한 나라 당 조건부반대

-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선완화 절차와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 있음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다 많은 공적자금회수를 위해서도 필요
- 외국계 투기자본에게만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적대적 M&A 등 외국계 투기자본으로

부터 금융권을 지켜내기 힘들

- 국내은행의 70%가 외국계 자본에 소유되어 있는 등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
- 제조업만으로는 1인당 소득 3만~4만달러의 선진국에 오를 수 없고 금융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폐지하여 금융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함
-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나 불공정 거래 등 과거행태가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단계적 규제완화, 철저한 감독기준 제시와 모니터링으로 막을 수 있음

자유선진당 ■ 찬성

-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사금고화나 세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금융감독 역량의 강화나 제도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유지

민주노동당 ■ 찬성

- 재벌 또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자원의 독점 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에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산업자본이 주요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 출자총액제한폐지,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정부정책은 정부가 재벌의 협박에 굴복하여, 구시대적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은행 또는 유사금융기관까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자원을 독점하여 국가경제를 왜곡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며, 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창조한국당 찬성

- 기업의 과욕을 부추기는 은행소유로 IMF외환위기라는 아픈 과거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됨
- 금융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신체의 혈맥, 금융 산업은 심장과 같은 역할 임. 3만 달러 소득 비전달성, 성장한계에 부딪힌 한국경제 해법은 중소기업 강국이외에 국제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활성화의 금융한국에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한 미국중앙은행의 2천억불 공적자금 지원 등 미국은 총 1조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금융기업인들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심각함
- 한국의 상업은행은 세계 선진국중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의 90% 외국인 소유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간 매각안도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공기업 은행자산비중을 높여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의 낮은 이자 대출 등 은행활용 문턱을 낮춰야 함. 단 공기업 은행들의 모럴헤저드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처벌이 따라야 함.

친 박 연 대 조건부반대

-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필요,
- 외국 투기자본 대비 국내자본 역차별 개선 필요
- 글로벌 경제에서 부응하는 금융산업 육성 기반 구축

2. 부동산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
-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거래 과정의 과세는 높고, 보유 과정의 과세는 낮음
-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 주택가격의 변화율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율, 기준시가, 재산세율의 적절한 조정방안을 연구할 필요

한 나라 당 ■ 기타

-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문제
 -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노후대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야 함

자유선진당 ■ 찬성

- 현재의 부동산 세제들이 시장원리가 아닌 규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산층 및 실수요자 입장을 반영하여 인하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노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등 대폭 완화

민주노동당 ■ 반대

-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부동산 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은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하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유세율이 낮으면 재산보유액 크기에 따른 세금 부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투기로 집중되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소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적정세율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실효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중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이릅니다. 전체 세수를 구성하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상대적 비율도

우리나라는 3:7로써, 영국과 일본의 4:1, 미국의 48:1 등에 비해 크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그러한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보유세의 과표적용을 고가보유자와 저가보유자로 나눠 적용해야 함
- 현행대로 6억원 이상의 고가보유자는 인하해서는 안 됨. 오히려 과표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 함. 그러나 소득양극화 시대의 공동번영을 위해 6억원 이하의 보유자는 인하해야 함.
- 조세의 기능은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많이 징수하여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행복한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쓰자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임. 그래야 상식적으로나 정의의 관념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재산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재산세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처분할 수 있으니 집이나 토지가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선순환적임.

친 박 연 대 **조건부찬성**

- 탈 규제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세제를 골격으로 투기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을 상향,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 감면

3.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소득증가라는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이나 경험적으로 불분명하며, 또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구간을 다단계화하고 그 구간을 확대하여 현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 나라 당 찬성

- 경제성장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선진경쟁국 수준으로 세율 인하해야 함
 - 법인세율 인하 : 높은 세율(25% → 23% → 20%), 낮은 세율(13% → 10%)
 -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 1억원 이하 13% → 2억원 이하 10%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10% → 5%
 -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일반 10%, 중소기업 3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의 축소·정비 등 세원기반 확충방안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세수감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해야 할 것임.

자유선진당 찬성

- 현행 법인세율은 국내기업의 투자와 해외자본 유치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

민주노동당 반대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로 미국 35%, 프랑스 33.3%, 일본, 영국, 독일 30%는 물론 OECD평균 26.7%와 비교해 낮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4% 가까이 확대된 것은 법인세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나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 등은 2000년 이후 하락하고 있어 개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 이미 다양한 세제혜택을 입고 있는 외국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 투자효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장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 뿐이었습니다.
- 법인세 인하는 직접세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그만큼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복지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혜택은 재벌기업과 부유층에게, 피해는 서민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현행과표 3억원 이하는 법인세 인하찬성, 그 이상은 현행대로. 중소기업 대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에 이전시의 법인세 경감혜택도 찬성.
-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법인세율 금년 3%인하 22% 방침으로 연간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 그런데 법인세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0%이상이고, 중국도 33%로서 우리보다 많이 부과함.
- 쌍둥이 적자의 미국도 그렇듯 세계 어느 나라도(싱가폴 등 도시국가이외에) 법인세 인하로 투자활성화 등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음. 대기업들은 현재 현금보유고가 200조원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한 상황임.
- 국가채무는 2007년 말에 300조원으로 추정함. 국채 이자만 해도 지난해 12조9000억 원에 달함. 대기업 법인세 줄이지 말고(부채 줄이거나) 그 돈을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자 해소대책에 써야 됨.

친박연대 **찬성**

- 국내기업 투자활성화와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유치 환경 조성
-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차별화 필요

4.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시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집중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삶의 질의 개선이 어려운 까닭은 수도권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었기 때문
- 따라서 향후의 수도권 규제는 중앙정부·수도권과 지방 간의 합의에 의거하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정책이 바람직함
-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 동북아 허브구축을 위한 금융 및 물류산업 등을 위한 규제완화방안 연구 필요

한 나라 당 ■ 조건부찬성

-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대신, 지방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자유선진당 ■ 조건부반대

- 지방경제의 공동화와 수도권·지방간 갈등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단,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활동과 관련해 내·외국인의 역차별은 시정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00대기업 본사 92%, 벤처기업 77%, 중앙행정기관 84%, 주요대학 65%, 제조업체 56.7%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2002년에는 이미 연간 12조4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인구집중과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국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과밀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 수도권의 양적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세계화 시대에 수도권은 상해권, 빼이징권 등 거대 메가로 폴리스와 글로벌 경쟁 중
 - 수도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은 zero sum이 아닌 상생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되,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자기업에게 허용하는 수준의 공장신증설은 허용
 - 환경 및 일자리 파괴산업은 제외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발전 전략의 대청사진 하에서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수립 되어야 함
 - 환서해경제발전 전략의 추진 하에 수도권, 충청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 강원도와 영남권도 새롭게 환동해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함.

친 박 연 대 **조건부찬성**

- 국토균형발전의 기초는 유지하되, 도시형 첨단산업의 촉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필요
- 내·외국인의 역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

Ⅱ. 사회·복지분야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성

- 사회복지제도 도입 등으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길은 열어 놓았으나, 향후 병역기피자 대책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임

한 나라 당 조건부반대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는 시기상조임.
 -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역살이를 하고 전과자가 (연 800여명) 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면이 있음.
 - 그러나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경우 타 종교단체는 평화를 애호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 발생
- 종교나 양심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한 나라당은 조건부 반대
 -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 진정으로 검토해야할 문제

자유선진당 반대

-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과 현재의 판결로 이미 위법임이 결정된 사안임
- 군복무에 대한 국민정서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감안하면 시기상조임
- 한반도 평화보장 등 국가안보가 더 중요함

민주노동당 | **찬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해 6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행동에 옮겼다는 이유로 3년의 수형생활을 강요받고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입대한다면 정상적 군복무가 어려워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손실입니다.
- 따라서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합법화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해 이들이 보다 생산적 사회복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적 사회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보건·복지·보육·육아 등의 사회복무활동으로 사회적 공공 서비스 역시 획기적으로 확대·강화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일각이 주장하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두어 당사자의 서면사유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 내역, 그리고 공인 받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보증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 **찬성**

-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인정은, 살상용 집총 등 군복무가 양심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신하는 소수 평화주의자들의 신념과 양심을 민주인권국가로서 포용 존중하여 보호하되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공익성 대체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찬성함.
- 우리나라는 이미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폭넓게 인정해 왔음. 예컨대 이공계 학생에 대한 대체복무(산업체대체근무), 건강과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공익근무) 등을 폭넓게 인정해 왔음

친박연대 | **반대**

- 신성한 국방의무가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며,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반대
- 특정 종교단체의 형평성 문제, 병역기피 수단 악용 소지 등으로 반대

2.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우리 헌법은 국적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국적권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제한 가능
- 따라서 이중국적이 병역의무 등 국민적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후 허용됨이 바람직

한 나라 당 ■ 조건부찬성

- 이중국적의 전면 허용 시, 외국에서 생활하는 이중국적자가 의무는 면제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만을 누리게 될 수 있음.
-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교 및 사업상의 목적과 재외동포 및 한국계 외국인의 한국 진출 등 국력에 이바지 하는 특수 경우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함.
- 저출산 및 한국국적 포기로 인한 자국민 수 감소방지 및 국제결혼·이민·다국적기업 등 글로벌시대에 모국과의 유대 계속 유지 필요성 고조

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우수한 해외인력 유치 등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정
 - 병역을 마친 한국인,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이중국적은 허용하되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적용방식에 대한 조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적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준이며, 문화적 귀속감의 표현입니다.
- 현대사회와 같이 국제적 이동과 이주가 빈번한 시대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의 문화적 귀속감과 신념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일본의 재일동포와 한국의 화교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도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국적이 아닌 거주지(기간), 고용지(기간)를 기준으로 부여하거나, 납세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 등이 그것입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국적법 개정 정책은 인재 개방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인력이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외국인 투자회사는 물론 한국인 회사에도 미국처럼 인도 중국 등 저임금 고급인력이 들어와 고급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음. 따라서 국내 인력의 세계화 대책 또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깊이 있게 사전 논의해야 함.
- 한국에의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찬성함.
- 한국이 복수 국적을 완전히 인정하기에는 아직 국가경쟁력에 자신이 없고 국민 정서가 호의적이지 않음. 해외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한 의무(예,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찬성함.

친 박 연 대 **조건부찬성**

- 투자이민, 첨단 지식 산업, 글로벌 금융 산업 등 우수능력 보유자에 대하여 국익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외국 국적인의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함.

3.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을 '08.2.26일 폐지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소화하여 도입
 - 관련법을 폐지한 것은 아파트 미분양 급증 등 지방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요인 축소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종래 전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 대상으로 축소하고, 부담금 산정기준도 지역별 기반시설 소요량을 감안하여 완화하면서 존치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사회적·공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킨 것이라고 평가

한 나라 당 ■ 조건부찬성

- 기반시설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위해 '06년 7월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 발생. 기본시설부담금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및 주택공급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재개발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가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유지하여야 함.

자유선진당 ■ 반대

-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자에게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한다면 실제 요구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의 자녀들이 근처 학교가 없어 먼 곳으로 통학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할 의무는 정부에게 있지만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외면한 채 국민의 혈세만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학교용지뿐 아니라 광역교통시설 등의 기반시설 사업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됨. 부담금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은 반대함.
- 그러나 내대지인 땅에 아파트를 지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은 정부로 환수”돼 기반시설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함. 현재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체제 야합과 무능으로 원가공개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건설업체와 분양자에게 과도하게 배분되는 측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즉 주공·토공 등 시행사, 건설사, 분양자, 정부 등이 나눠 갖게 되는 잘못된 상황임.
- 택지개발이익금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택지개발이익금의 철저한 국가환수로 기반시설비 부담 및 신혼부부 특별주택,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써야 됨.

친박연대 ■ 조건부찬성

- 기반시설의 수익자 부담원칙은 합당하나 일률적 부담금 부과는 개선이 필요하고, 특정지역에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도록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4.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2028년 이전까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현 노령층 및 잠재적 연금 사각지대 계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함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조차 얻지 못한 현 노령층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공부조 성격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조세방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막대한 자원 소요로 인해 후세대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노인인구 비중이 적은 지금 당장은 소요 자원이 적을 수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2030년 이후 소요 자원은 막대할 것임

한 나라 당 ■ 찬성

- 한나라당은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고, 기초부분은 부과방식으로, 소득비례부분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함.
 - 또한 기초노령 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수급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자유선진당 ■ 반대

- 현재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원천적인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제도를 소득비례연금 제도로 발전 개편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으로 고쳐야 함

민주노동당 ■ 기타

-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연금 통합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이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먼저, 재정고갈을 피할 대책이 없습니다. 수백 조원까지 들어갈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정작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담을 다음 세대와 정부에 지을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여 고소득자 혜택은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서민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아예 못내는 서민,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에서 관건은 미래 연금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조세+사회보험료)은 GDP의 25.3%로 OECD 평균인 36.3%에 11.0%가 부족합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88조에 달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적재정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조세개혁 반드시 병행, 시행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이명박정부의 이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 이는, 외환위기 이래 노령층의 1/3 가량이 빈곤에 처한 '빈곤의 노령화' 추세를 오히려 심화시켜, 노후 빈곤 예방이라는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마저 약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 또한, 이명박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① 낮은 출산율과 ②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③ 경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스스로 "양극화를 약화시킬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 것임
- 창조한국당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과 출산율을 향상시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 수급율을 보장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음

친 박 연 대 ■ **찬성**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고, 기초부분은 부과 방식으로, 소득비례부분은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노령 연금의 기초연금화가 바람직하며, 수급대상 확대도 필요함

Ⅲ. 교육 · 환경분야

1.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설립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특목고와 더불어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고교의 입시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체시킬 우려가 높음
-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과 과도한 학비부담으로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저해하는 등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예상됨

한 나 라 당 ■ **찬성**

-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열린 교육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자율형 사립학교 대폭 설립(지정)에 찬성함
- 특히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학교의 기본 취지를 아우르고 재정독립에 의한 자율 보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학교설립의 취지와 목표에 의한 자율보장”이라는 점에서 보완 발전된 개념임
-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선발, 등록금 및 교과과정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정하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로서 학부모의 호응이 높아 지난 정부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20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일각에서 일반학교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던 사례가 있음
- 이에 반해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보다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

자유선진당 ■ **반대**

- 사학재단의 의무는 적고 정부재정지원만 확대되는 자율형사립고의 대폭 설립은 정상적인 공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와 배치
 -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사학운영에 국가 개입의 여지가 확대되는 등 자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 사학의 자율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원을 축소해야함

민주노동당 ■ **반대**

○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외국어고는 상류층이 독점하고 있는 일류대 진학코스로 전락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잘 사는 집 자녀만 진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교평준화 시대의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가 생겨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 까지도 온갖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일부 부유한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귀족학교이며 또 막대한 사교육비의 진원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는 잊은 채 일류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자립형 사립고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100곳 도입 프로젝트는 구호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우면서 행동으로는 사교육비를 부추켜 대다수 가정에 고통을 주는 이율배반적 정책임.

- 사립고를 대폭 추진하면 고등학교부터 부자학교와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고교 평준화 체제는 무너지게 됨. 중학교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노린 입시교육이 판치게 될 것임. 고교·중학교 서열화로 이어져, 힘들게 인성교육을 해 온 초등교육마저 국·영·수 암기 위주의 공부와 평가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후진국 교육이 될 것임.
- 대안으로 학교 내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학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세계 제일 가는 강의 등 컴퓨터 활용의 다양한 학습을 해야 함. 그를 통해 학교 간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습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안의 다양화로 세계제일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함.

친박연대 ■ 찬성

-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에서 다양한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에 찬성함
- 입학생의 일정 비율은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할당하고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2.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자율화에 동의하나 대학에 완전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본고사 부활'이나 '수시 위주'의 변형된 입시형태로 기울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음
- 교육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파장 또한 심대하다는 점에서 대입자율화 또는 학생선발권 같은 민감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허용함이 타당
- 따라서, 대입정책은 자칫하면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시장 성행을 불러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은 곤란

한 나라 당 ■ 조건부찬성

- 지난 정부에서는 3불 정책을 고집하느라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고교마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 되어 대학은 내신성적을 불신하면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에 대해 지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규제들이 도리어 문제를 심각하게 한 것임
- 이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평가되도록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해야 함
 - 다만, 대학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단계이므로 대학당국의 다양한 선발능력제고 노력을 확인하면서 자율선발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어느 학교가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교육 정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율을 늘려야 할 학교와 지원을 늘려야 할 학교를 구분해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게 하고, 부진한 학교는 끌어 올려야만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 찬성

-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대학들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단계별로 대학입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3중고를 완화하겠음

민주노동당 ■ 반대

- 우리나라 학생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육에서 최우선의 가치이며, 교사, 학교(정부),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선발권

을 대학이 갖는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공부할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 대학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고른다는 것은 곧 대학 탈락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소위 명문대 입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종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 부자의 자녀들만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 고교졸업자격이나 대학입학자격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적인 사교육비와 과도한 입시지옥을 해소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학생선발권을,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분을 망각한-제자 논문을 베끼고, 연구비를 유용하고, 입시비리에 개입하는 정치교수 부패무능교수가 아직도 활개 치게 만드는 대학 운영자들에게 결코 맡길 수 없음.
-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 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평가와 선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별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경쟁국인 중국은 28위(조사대상 55개국)에 올랐으나, ‘대학 개혁의 무풍지대’ 같은 한국은 40위에 머물렀음. 40위는 국가경쟁력(29위·IMD 조사)보다도 크게 처져 있음. ‘대학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상황으로, 대학부터 우선 철저히 쇄신돼야 함.
- 현 총점제 선발제와 같은 점수 위주 선발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다양한 전형자료에 근거한 질 중심의 다단계 선발제를 도입해야 함.

친박연대 **조건부찬성**

- 대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학생 자율선발권을 단계적으로 인정토록 함

3. 자가용 사용의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반대

-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 등의 세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민생차원에서 국제유가의 동향에 따라 인하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 나라 당 반대

- 소득 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유류관련 세금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민총소득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가정 할 때 일본 31, 호주 29, 캐나다 28, 미국 17 수준이며, 휘발유 세금 수준은 우리가 100일 때 일본 23, 호주 19, 캐나다 15, 미국 4에 불과하며,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은 우리가 58%인 반면, 일본 41%, 호주 38%, 캐나다 31%, 미국 14%에 불과.
-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소비는 가격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유류가격이 낮아져도 소비는 크게 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유류세 인하와 자가용사용 억제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유류세 인하의 근본 취지임

자유선진당 반대

- 유류세 재원이 대기오염 방지에 투자되지도 않고, 자가용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상실하여 목적세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채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자가용은 필수품화 되어 가격정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

민주노동당 찬성

-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1,000명, 이로 인한 비용이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오염물질 배출량 38만여톤의 78%가 자동차 매연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석유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지구 온난화와 환경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장치입니다.
- 유류세 인하 정책은 고유가를 비롯해 높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성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화로 인한 세수결손 대책은 물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석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유류세의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유류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류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정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자가용 수요를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흡수해 나가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반대

- 한국 국세청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보통사람들에게는 부가세 등 간접세의 세금폭탄을 매기고 있음. 따라서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현 50퍼센트 수준의 직접세 비율을 미국, 일본의 75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불로소득 세금도 더 올리고해서 부가세 등 간접세는 낮춰야 함.
- 유류세는 당초 2003년까지 한시적 목적세이므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폐지 후, 국민과의 합의를 거쳐 환경세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무료나 초저가로 이용하게 하여 유류절약을 스스로 하도록 유인해야 하며, 대기오염 개선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보급 확대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류세에 포함된 교육세는 미국처럼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여 독일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게 해야 함.

친 박 연 대 ■ **반대**

- 우리나라의 유류관련 세금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유류세 인하가 필요함

4. 그린벨트는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통합민주당** ■ **조건부반대**

-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의 정부가 '99.7월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20년 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예정
 - 지역별 해제 총량과 조정가능지역 확정
(시·군별 해제 총량 확정)
 -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해제 예정지역 적시
 - 그러나 해제예정지라 하더라도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보전 녹지 등으로 보존할 수도 있음
- 이 밖에 지자체에서 신규 해제수요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해제를 요청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의 이용에 한정해서 점진적 및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검토할 필요
 - 원칙에 예외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제도를 지속시킬 수 없으며, 점진적인 해제도 불가능하기 때문

한 나 라 당 ■ **조건부찬성**

- 그린벨트는 그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교외의 녹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사실상 녹지로서의 가치를 잃어 더 이상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국토의 이용가치를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가격안정을 도모
 -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및 그린벨트지역 투기자의 개발이익 환수 등의 보완조치를 실시함.

민주노동당 **반대**

-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주민의 재산권제약과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해제하며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녹지 보전공간 보다는 임대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팽창 확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압력을 가해 결국은 제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린벨트가 뉴타운이나 임대주택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있어 서민 피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 그린벨트 제도는 해제가 아니라 적정하게 관리, 강화해야 합니다. 해제 그린벨트는 생태공원, 시설녹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기존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친환경적 생활환경 개선을 허용하고 건물 증개축시 생태건축 유도, 친환경농업 지원, 저리 용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반대**

-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토건사업 중심의 사고와 기업투자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과 불로소득 방지대책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의 해제는 절대 반대.

- 개발 용지의 대대적인 점진적 공급으로 인한 인구유입과정은 서울 의존적 도시들을 양산하고,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로 인해 주거, 교통, 교육 등 도시민의 생활여건은 급속히 나빠질 것. 다수 국민의 삶의 질,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는 절대 없여서는 안 됨.
-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유발인데다 개발용 토지비중이 영국 13.0%, 한국 6.1%로 토지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계획 하에 일시에 지정하여 오르기 전의 시세대로 국가에서 매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국가이외에 개인 등이 불로소득을 챙기게 해서는 안 됨.

친 박 연 대 **조건부찬성**

- 국가경쟁력 강화와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의 점진적 해제가 필요함
-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의 적절한 해제가 필요함

IV. 정치 · 행정분야

1. 제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기타**

-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박정희 정권 같은 과거 장기 독재정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의지의 표현
- 단임제는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조급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어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

- 다만,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비롯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

한 나라 당 ■ 기타

-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정은 헌법상 통치구조의 골격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개헌을 수반하게 됨
-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총체적인 국가발전 목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계 각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 전반에 걸친 헌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 개헌 논의 가능

자유선진당 ■ 반대

- 개헌은 향후 50년 지속 가능한 틀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단순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민주노동당 ■ 찬성

- 국정 수행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합니다. 단, 책임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선투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단순 다수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군부독재정권과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이해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통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낳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정권의 정통성 및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여 1차 투표에서 선택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2차 선호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대통령 중임제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결선투표제로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현행 헌법에 의해 지난 20년간 운영되어 온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への 권력집중,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 노출
-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다양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는 보다 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집하고 참여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선과 독주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대신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협의적(協議的) 민주정치의 원리가 확대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국정의 외치(外治)와 내정(內政)을 분리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외교, 통일, 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내각의 수반인 수상은 나머지 분야의 국정을 담당하는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로의 개헌이 바람직함

친박연대 ■ 찬성

-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함.

2.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무엇보다 언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서는 안됨

- 헌법재판소도 2006년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므로 이 두 수단의 융합은 전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 나 라 당 **찬성**

-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 겸영금지는 시대조류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여론독과점 및 시장지배구조집중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부연하면 첫째, 정보통신테크놀러지 발전으로 신문방송의 상호중첩영역이 확대되는 등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둘째,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경향에 부합하는 신문방송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할 상황임. 미디어산업은 21세기 최고의 성장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핵심에 해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란 논리가 강조되어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신문방송 겸영허용은 세계로 나가야 할 미디어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도 필요함. 셋째, 겸영허용 반대이유의 하나인 여론독과점 문제는 미디어 다양화로 인한 신문의 영향력 감소로 그 가능성이 한층 낮아진 상태임.

자유선진당 **조건부반대**

- 교차소유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독과점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언론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민주노동당 **반대**

- 현행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송은 완전히 사유화된 독과점 신문과 다릅니다. 정부와 시민사

회가 방송의 편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공적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공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파 희소성에 기초한 공적독점의 시장형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송의 공적 독점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공적독점의 장벽을 무력화시켜 독과점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무력화된다면, 이제 신문시장의 독과점 세력인 족벌언론이 방송까지 아우르는 전체 여론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신문시장은 족벌언론이 비정상적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여론왜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문시장의 위기가 방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그래서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신문의 방송겸영 금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반대**

-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전면 허용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 현재 상황에서도 메이저신문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메이저신문이 방송까지 겸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부분적으로 허용돼 있으며, 최소한의 다양성 유지 장치로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겸영을 금지하고 있음. 이 제한이 풀린다면 진보 내지는 개혁적 신문들이 고사되어 최소한의 다양성마저 상실될 것임.
- 방송영역의 경우, 케이블과 위성, DMB, IPTV 등 플랫폼에서 상업적 채널이 흥수를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지상파 공영방송(KBS와 MBC)에 대한 대기업의 민영화 요구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맞춰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공영방송을 지켜내기도 어려울 것임.

친박연대 **찬성**

- 세계적 정보통신 융합 트렌드에 부응한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의 겸영허용이 필요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찬성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계속 추진 필요
-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발전 및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추진할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80년대 이후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임
 -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속 추진
 -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에는 공원, IT산업 등이 들어오게 될 것이므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도 강화될 것

한 나라 당 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분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문화·주거환경등을 최적화하여 당초 목표한대로 국토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자유선진당 찬성

-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는 완성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및 국회통과가 시급함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위헌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와 국회 여야의 합의로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당리당락을 떠나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역시 단순히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래의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충청권의 발전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통일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안으로서 세계적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국제적 교육 연구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MIT 또는 하버드대나 예일대처럼 우수하며 학비는 저렴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이 있는 창조적이고 자랑스러운 행복도시가 되어야 함.
- UN 기구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고 UN국제대학원 설립, 국가정책대학원설립 등 세계적 인재들을 양성하는 동북아제일의 국제평화연구 도시로 만들.
- 환경을 비롯한 생활·문화여건에서는 세종시 건설을 건강, 생명, 안전, 쾌적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주민이 스스로 이주할 수 있는 웰빙 도시로 만들.

친박연대 **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사업 계속이 필요함.

4.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 현행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교통의 발달 및 도시화 등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 필요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로 이원화되어있는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 광역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한 나라 당 ■ 조건부찬성

- 고비용·저효율의 자치계층구조 개선 필요
 - 현행 시·군의 인구편차가 30~40배에 달해 인구 3만에서부터 100만에 이르는 극심한 편차
 - 소규모 군지역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력·예산은 증가
 - 군지역 인구 $\Delta 2.8\%$ (04~06), 인력 5.7% 이상, 예산은 24% 이상 증가
 - 시·군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조직 및 시설 운영
 - 인구 3만의 군지역은, 인구 30만의 시·군지역에 비하여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는 4.1배, 예산규모는 3.3배, 공공시설은 2.1배에 달함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인위적 경계 설정
 - 동일 생활권내로써, 자치단체로서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나 특별히 구분하여야 할 근거와 명분 희박
- 기본방향
 - 고비용·저효율의 중중소규모의 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의 간편 광역체제로 개편하고
 -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여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 해소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

자유선진당 ■ 찬성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구역의 전면적인 개편이 바람직
 - 연방제형 지방정부 구성에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재정립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 주민생활에 불편함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 규모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통폐합은 반대합니다.

-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에 버금가는 광역행정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신인 지방분권정책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외국 사례처럼 더욱 세분화 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당 인구수,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등 현저하게 과다한 비율을 감소해야 합니다. 지방행정구역은 현재 (준)광역화된 대도시를 분리하고 다양한 대도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 찬성

- 234개 기초단체의 경우, 예산과 인구에서 양극화가 심함. 나아가 지방의 국제적, 세계적 경쟁력이 없이 수도권 경쟁력만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규모의 행정구역과 이에 기반한 지역 간 연계 경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추진된 중앙과 지방의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계층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전면개편 논의 시 행정구역통폐합과 함께 행정계층축소를 함께 검토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예. 현행 3계층(국가-광역-기초)적 행정계층구조를 광역을 제외한 2계층화)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국민과 기업에 이중의 통제장치만 추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만 하나 더 늘리는 결과 초래함. 분권 및 행정광역화를 핵으로 하는 시도(市道) 행정구역 전면개편이 지난하지만 궁극적인 과제임.

친박연대 ■ 조건부찬성

- 국민의 생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함.

V. 외교 · 안보분야

1. 이라크 파병은 계속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음
- '03년 4월 서희·제마부대 파견에서부터 '04년 7월 자이툰 부대 파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군부대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국민과의 약속대로 연말까지 철수계획을 이행해야 할 것임

한 나라 당 ■ 조건부찬성

- 당초 이라크 파병 목적은 △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 한미동맹관계 강화 △ 국익 실현 등 복합적인 것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파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1년 더 연장한 것은 상기의 목적을 보다 확실히 완수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임
- 자이툰 부대가 하고 있는 일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설, 컴퓨터나 중장비 등 교육, 환자 치료 등 평화와 재건을 돕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전쟁이나 전투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기 전에, 그동안 자이툰 부대가 하던 일이 민간으로 순조롭게 이양되어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한국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더라도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인력, 국내 기업인과 교민 등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병력을 주둔시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찬성

- 국제공헌, 한미동맹, 평화유지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
 - 한미동맹 강화,
 -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 외교 및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
 -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 및 의료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인권차원에서 문제없음

민주노동당 반대

- 파병 연장으로 얻을 국익이란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때문에 미국협조가 필요하다지만 파병 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파병의 결과가 아니라 북 핵실험, 이라크 전황의 악화, 미 공화당의 위기 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또 자이툰 부대가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자이툰평가사업단 내부 평가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군대 주둔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투자유치, 즉 돈만 싸들고 오면 무조건 환영한다고 합니다. 재건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국내기업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기업 관계자는 장래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이툰 부대는 물론 모든 파병군은 철군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이미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났고, 우리 헌법 5조는 침략전쟁 부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했던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모든 경우가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던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반대

- 이라크전쟁은 ①외국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이미 상실되었고 ②한국군의 당초 파병 목표로서 이라크 질서의 안정과 국민보호 그리고 미국정부 의견존중의 한미공조는 이미 달성했으므로, 한국군은 철수되어야 함.

- UN 평화유지군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활동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면서 평화 유지, 정착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당사국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을 존속시켜야 함.
- 따라서 한미공조와는 별도로 이라크 정부와 국민이 적극 요청하고 향후 전후 복구사업 등 우리 기업 진출을 통한 한미동맹과 실질적 국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수는 있음.

친 박 연 대 ■ **찬성**

- 세계평화유지와 국익에 부합한 국제적 역할 담당
- 글로벌 환경의 급변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속의 역할 정립 필요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국가보안법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민족국가 리더십의 분열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특별한 성격의 법률임
- 그러나, 현행 법률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혼재해 있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통일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할 필요

한 나 라 당 ■ **조건부반대**

- 과거에 비해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라는 주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법의 근본취지는 불변함.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상징이자,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폐지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과·오용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의 부분 개정이 바람직 함

자유선진당 ■ **반대**

-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유지, 노동당 규약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한국만 보안법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

민주노동당 ■ **찬성**

- 남북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고, 장관급 회담이 수시로 개최되며, 각종 사회문화교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변화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시대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대한민국 안보 근간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 이미 합의한 만큼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구시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찬성**

-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폐지를 권고 받을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법률임. 국보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로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요소를 갖고 있는 법임. 분단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법임. 역사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이 정권안보용으로 이용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정치참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고 인신구속을 남용하는데 활용하였음.

- 그러나 분단 현실이 존재하는데, 국보법 폐지는 2004년 국보법 개폐 논쟁 때처럼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국보법 때문에 남북한 교류가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해 볼 때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분단 구조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법을 폐기시켜야 함.

친 박 연 대 **조건부반대**

-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근간이 되므로 안정된 한반도 평화정착 전에는 시기상조임.
-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이 바람직 함

3.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통합민주당 **반대**

-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어느 사회,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음
-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부터 우선 보장할 필요

한 나 라 당 **찬성**

-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보호받을 권리가 국경을 초월하여 있음.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자세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해 무조건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북한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대북경제지원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해내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대북경협 사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주지시켜야 함.

자유선진당 ■ **찬성**

- 식량, 분유, 의약품, 의류 등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한 대북경제 지원은 인권 개선을 포함한 북한의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존권을 “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남한은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 북한 인권문제 또한 현재와 같이 UN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남북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인권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구에서 인권의 개념, 내용, 개별사회에 제기되는 인권 현황 등 서로 상이한 체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내용부터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인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거세게 몰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한·미 동맹 강화에 맞춰 인권문제와 경제지원을 연계시키려다가는 자칫 전쟁위기 초래 등 한국민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음.

- 전쟁위기가 언론에 비치기만 해도 한국주식시장 등 경제가 곤두박질침. 따라서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한반도안정과 연동되는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권을 포함하여 북한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인권과 한반도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함.
- 결국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인권 문제가 해결되게 해야 함.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 정경분리원칙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적극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의 인권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

친 박 연 대 **찬성**

- 대북경제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실효성
-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경제지원은 중단되어야 함

4.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조건부찬성**

- 개방·국제화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며, 한·미 FTA 체결 등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한 시기
- 다만, 한계기업 및 그 근로자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 소득감소, 경쟁력이 약한 농가의 이탈 현상 등에 대한 소득보전대책과 고령농 등에 대한 농어촌 복지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
- 이와 같이 한미 FTA는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 나라 당 찬성

- 한국경제의 도약과 체질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유와 개방,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국제무역시장에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함.
- 미국과의 FTA 추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지구촌 시장화라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음.
-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미국 시장을 더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FTA라는 새로운 개방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 할 것임.
- 한편, 농어업 등 구조적 취약상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경쟁력 강화지원이 따르도록 그 대책도 함께 철저히 강구 할 것임.

자유선진당 조건부찬성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접근 확대와 국내의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제도의 선진화 등의 이익이 기대되므로 찬성
 - 단, 농업 등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 적지 않은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나 체결시에도 찬성여론은 50%를 넘지 않았고 반대여론은 35% 가량 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우리 사회는 현재 양극화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 행복, 안전을 추구해야 할 국가의 기본 역할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수를 제한

하거나 경제위기시 위기대응 조치인 금융세이프가드를 적절히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등 국민건강의 직접 위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 우리는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원 등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독선적이고 비밀스럽게 협상과정에 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건 협상 내용 뿐 아니라 각종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가 아니라 급조해 만든 오류, 왜곡투성이 짜깁기였습니다. 한미FTA는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한국당 **조건부찬성**

- 한미 FTA는 문화와 건강, 식량, 의료 등 필수적 공공요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이를 외국시장에 내 맡길 위험 등,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큰 협정임에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국민무시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 2008년에도 유가와 환율 등 국제 경제 변수는 예측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체결이 가시화되면 중소기업은 지금까지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임.
-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미 FTA의 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그런 마당에 우리만 몸이 달아 24개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하게 해치우려는 태도는 큰 잘못임.
- 새 정부는 한미FTA 협정 국회 조기비준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모아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인 개성공단 생산품 및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통과시켜야 함.

친박연대 **찬성**

- 새로운 경제도약과 글로벌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간의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함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정당의 10대 기본정책

◆ 통합민주당

10대 기본정책	비 고
I. 경제·민생분야	
1. 일자리 : 우리는 신성장동력산업,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민생경제 : 우리는 서민·중산층의 경제 주름살을 제거하겠습니다.	
II. 사회·복지분야	
1. 사회통합 :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 복지 : 우리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III. 교육·환경	
1. 교육 : 우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해소하겠습니다.	
2. 환경 및 지역 : 우리는 환경친화적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IV. 정치·행정	
1. 정치 :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정을 견제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 행정 : 부정부패의 사회적 요소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V. 외교·안보	
1. 평화통일 :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2. 외교 : 새로운 한미동맹체제 구축과 EU, BRIC등 외교 관계 다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비 고
<p>I. 경제 · 민생분야</p> <p>1.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p> <p>2.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p>	
<p>II. 사회 · 복지분야</p> <p>1. 여성 · 가족행복, 사회안전강화로 국민행복을 이루겠습니다.</p> <p>2.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III. 교육 · 환경</p> <p>1.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p> <p>2.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p>	
<p>IV. 정치 · 행정</p> <p>1. 법치회복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p> <p>2. 정부의 GLOBAL 경쟁력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p>	
<p>V. 외교 · 안보</p> <p>1. 자원외교, 통상외교, 문화외교를 실용외교 차원에서 전개하여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ی겠습니다.</p> <p>2. 안보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시대를 만들겠습니다.</p>	

◆ 자유선진당

10대 기본정책	비 고
I. 경제 · 민생분야	
1. 작은 정부	
2. 과감한 개방	
II. 사회 · 복지분야	
1. 지속가능한 복지	
2. 공동체를 통한 신뢰구축	
III. 교육 · 환경	
1. 공교육 혁신	
2. 친환경사회	
IV. 정치 · 행정	
1. 획기적 분권	
2. 법질서의 확립	
V. 외교 · 안보	
1. 남북관계 재정립	
2. 한 · 미동맹과 외교다변화	

◆ 민주노동당

10대 기본정책	비 고
<p>I. 경제 · 민생분야</p> <p>1. 성장산업 육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1000만 고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p> <p>2. 소득 및 자산 재분배를 통한 서민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p>	
<p>II. 사회 · 복지분야</p> <p>1.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p> <p>2.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III. 교육 · 환경</p> <p>1.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p> <p>2.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일 것입니다.</p>	
<p>IV. 정치 · 행정</p> <p>1.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p> <p>2. 새로운 공화국,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습니다.</p>	
<p>V. 외교 · 안보</p> <p>1.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당당한 외교로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만들겠습니다.</p> <p>2.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p>	

◆ 창조한국당

10대 기본정책	비 고
<p>I. 경제 · 민생분야</p> <hr/> <p>1.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 창출</p> <hr/> <p>2.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p>	
<p>II. 사회 · 복지분야</p> <hr/> <p>1. 서민주택 지원</p> <hr/> <p>2.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p>	
<p>III. 교육 · 환경</p> <hr/> <p>1.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p> <hr/> <p>2.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p>	
<p>IV. 정치 · 행정</p> <hr/> <p>1. 공직부패추방</p> <hr/> <p>2. 지역감정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p>	
<p>V. 외교 · 안보</p> <hr/> <p>1.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확립 추진</p> <hr/> <p>2. 중견국가(Middle Power)그룹 형성을 통해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 공동 추진</p>	

◆ 친박연대

10대 기본정책	비 고
<p>I. 경제 · 민생분야</p> <hr/> <p>1.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인하 하겠습니다.</p> <hr/> <p>2. 광역경제권 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p>	
<p>II. 사회 · 복지분야</p> <hr/> <p>1.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p> <hr/> <p>2.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p>	
<p>III. 교육 · 환경</p> <hr/> <p>1. 지속가능한 환경중심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p> <hr/> <p>2.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방과 후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p>	
<p>IV. 정치 · 행정</p> <hr/> <p>1.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p> <hr/> <p>2. 전국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p>	
<p>V. 외교 · 안보</p> <hr/> <p>1. 대북경제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p> <hr/> <p>2. FTA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p>	

■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

I. 경제 · 민생분야

기본정책 1

일자리 : 우리는 신성장동력산업,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핵심내용

- 청년 · 여성 · 어르신 · 비정규직 · 실직자의 버팀목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업그레이드

○ 상세내용

- 글로벌 TOP10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6% 경제성장
 -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 첨단기업 1000개 유치
 - 개성공단 특구 확대, 한반도 철도 등 남북 평화경제 추진
- 연간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6% 성장으로 매년 42만 개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 2012년까지 2,0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육성
- 방송통신융합IT, 바이오 · 나노, 환경 ·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로봇 등 5대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
 - (가칭)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신성장동력 특별관리기반 구축
- 지속적 기술혁신과 인적자원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
 - R&D투자를 GDP의 5%까지 확대

○ 핵심내용

- 공공요금 상한제,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대책
-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요금 인하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부동산가격 안정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 주거복지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

○ 상세내용

- 물가안정대책
 - 전력, 가스, 도로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상한제 실시
 -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장바구니물가지수 개발
 - 비료·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축산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농협의 비료 취급수수료 인하, 저리(3-4%)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 가격경쟁과 가입비 폐지 및 기본요금 인하 등 이동통신요금 인하
 - 수송용 유류세 추가 10% 인하 추진, 시민, 정유사,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유가조정위원회』 구성, 버스·화물차 유류세 면세 추진
 - 신용카드가맹점 대표, 카드회사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금서비스의 수수료 상한선을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구조 마련
-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고급여 한도 인상
-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에서 1%로 인하
- 부동산가격 안정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 분양원가 공개검증 및 재심제도 도입
 - 수도권 99m²[30평형대]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주변시세의 60% 수준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호 수준 공급
- 주거복지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
 - 최저 주거수준 미달 주택을 향후 절반으로 축소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는 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Ⅱ. 사회·복지분야

기본정책
1

사회통합 :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핵심내용

- <사회통합 연석회의>(가칭) 구성
- 노사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의 시대 구현
- 지역간·세대간·계층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 상세내용

- 이해관계의 조정, 갈등해결, 국민참여 증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의 강화
 - '정부 및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사단체,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통합 연석회의>(가칭) 구성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참여와 협력의 노사정 관계 구현
 - 노사 양측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통해 준법 관행 정착
 - 노조의 쟁의권 행사에 대한 공권력 집행 엄격 제한
 - 2010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완료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 2009까지 노조전임자 임금 제도 정비, 복수노조 허용 입법 완료
- 중소·하청 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시대 구현
 - '(가칭)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한 벌점부과 강화를 통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 강화, 정부입찰 참가자격 일정기간(예 3년) 엄격 제한 등 불이익 강화
 - 중소기업 신기술·신사업 지정제를 도입하여 자생력 확보기간 부여 및 성과 공유제 확산

복지 : 우리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연금제도의 현실화를 통하여 소득 및 노후안정성 확보
- 7대 질환 무료 검진 강화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 상세내용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 투명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 추진
- 생애주기별 7대 질환 검진 및 기본치료비 바우처 제공
 - 영유아기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초등학생 매년 구강검사 및 기본치료 바우처 제공
 - 청소년기 주기별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성인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 지원.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 및 기본 치료비 지원
 - 노인틀니 국가예산 지원 추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아동수당제 도입, 확대 아동 예방정책 강화, 실종아동 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확대
- 저소득 빈곤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마련
 - 탈빈곤 지원.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지역별,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차등적용 추진

Ⅲ. 교육 · 환경분야

기본정책 1

교육 : 우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해소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공교육의 정상화 및 고품질화 추진
-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5명 실현
- 대학등록금상한제 · 후불제와 무이자 · 2%대 · 4%대의 저리 대학등록금 융자 추진

○ 상세내용

- 공교육의 정상화 및 고품질화
 -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
 -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축소
- 매년 3천명씩 5개월 정도 영어연수를 실시하여 실력 있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고, 12,000여 개의 전 학교에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여 영어실력 향상
- 등록금 후불제 실시
 -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이자율을 5%대로 인하
 - 재학과 미취업 기간동안 정부가 대출이자 상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정을 중심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
-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고교졸업자격시험 도입
- 특성화대학 20개교 육성, 교수 대 학생 비율을 현재 1:33에서 1:25로 대폭 조정, 대학강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 방과 후 학교를 더 알찬 내용으로 채워 확대 실시
 - 사설학원과 경쟁력을 갖는 초등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전면 확대

○ 핵심내용

- 환경보전체계 개선과 환경친화적 경제체제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모든 지역민들의 균형적 삶의 질 제고

○ 상세내용

- 환경 보전체계 개선과 환경친화적 경제체제 구축
 -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 수립
 - 개발·환경계획·환경성 평가의 통합적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 형성의 제도적 기반 정비
 - 포스트 탄소경제시대를 견인할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이용률을 제고
 - 환경산업 진흥법 제정 및 재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 환경산업 해외 진출 통합지원센터 운영
-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저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모든 지역민들의 균형적 삶의 질 제고
 - 「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도시 건설 등이 차기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 기능 강화

IV. 정치 · 행정분야

기본정책
1

정치 :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정을 견제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핵심내용

- 5.18민주화운동,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
-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하는 정당정치, 생활정치 실현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특권정치 청산

○ 상세내용

- 헌법 개정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 등의 민주적·평화적 이념 천명
 - 권력구조 개편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 사회적 기본권 강화
 - 부동산 공(公)개념 명시, 지방분권 보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교육제도 명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제 도입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 확대
 - 완전선거공영제, 사이버 선거운동, 전자투표의 제도화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
 - 해외 일시체류자나 국적 보유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선거권 부여
- 깨끗한 정치, 정책중심의 정치 구현
 - 정당 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정당의 정치자금 내역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 및 제재 권한 강화
 -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정당연구소 기능 강화

○ 핵심내용

-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개혁 확대
-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조성
- 국가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위험관리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 상세내용

- 국가경쟁력 강화,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 개혁 확대
 - 특정 법인세·소비세·거래세 징수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인정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보공개범위 확대
-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조성
 - 차관 및 차관급 외청장 등을 포함한 인사 청문 대상의 확대
 -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
 - 횡령이나 배임 등 재벌총수의 위법에 대하여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 손해 배상제도 도입
- 위험관리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 분산된 식품정책 업무 조정
 -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활성화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돼지, 소, 닭의 모든 사육단계로 확대
-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어린이 식품안전 특별법」 제정
 - 아동의 독극물 안전사고예방체계 강화
 - 실종아동 초기대응 매뉴얼 체계화

V. 외교 · 안보분야

기본정책
1

평화통일 :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남북간 경제·사회·문화교류를 통한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시대 선도
- 공동번영의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추진
- 인도주의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남북관계의 제도화

○ 상세내용

-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병행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6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동북아·한반도 평화협력 논의, 남·북·미·중 4자가 참가하여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북미·북일 수교 및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 개성공단, 해주특구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 해주항 개발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추진
- 대 한반도 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아철도협약체'를 구성하여 부산~파리 대륙철도 실크로드 개척
- 이산가족,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문제의 시급한 해결
-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사회문화적 통합의 확대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확립 촉구
 -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정비
 -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노력

○ 핵심내용

-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
-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외교다변화 추진

○ 상세내용

-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 방위비분담금 지원방식의 투명성 제고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 발전 강화
 - 미국비자면제 협정을 조속 체결
-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외교다변화 추진
 -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EU 국가들과의 실질협력관계 확대 강화
 - 아시아, 대양주, 중남미, 아중동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외교강국 실현
 -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및 기여도 제고 노력
 - ODA 확대와 지역·다자협력체 적극 참여
 - 인권 증진, 군축, 반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 수행 추진

■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

I. 경제 · 민생분야

기본정책 1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증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친화적인 성장정책 추구
- 취약계층 고용증진
- 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창출

○ 상세내용

- 기업규제완화 및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포이즌 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제도 도입
 - 중소기업 4대 어려움(높은 땅값, 기술개발능력부족, 자금부족, 고급인력난) 해소위해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우선적 지원
 - 법인세율 인하 및 최저한세율 인하
- 고용친화적 성장정책 추구
 - 산업구조, 기업지배구조, 금융구조, 노동시장구조, 사회보장제도의 고용친화적 개편
 - 투자에 대한 준비금과 세액공제 확대로 일자리창출기업 우대
- 취약계층 고용증진
 - 보육서비스 개선 여성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취업차별 폐지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개선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보증금 지급
- 지역별 구인, 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 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제조업과 역차별 시정
 -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 국내외 물류기업간 투자차별 시정, 기업 도시내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기본정책
2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겠습니다.

○ 핵심내용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지원
-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지역특화 및 향토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재래시장의 안정적 경영 기반 확충

○ 상세내용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 중소기업 친화적 수출 지원체제 구축
 - 광역지자체별 '원스톱' 수출종합서비스센터 설치, 지역특성별 해외시장 정보서비스 제공
 - 수출유형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 정부 및 공공부문의 R&D 지원자금 확대
 - 신기술 창업·사업화 촉진
 - 신기술제품의 정부기관 우선구매 의무비율 강화
- 지방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클러스터화 촉진
 - 장기·저가 임대산업 개발 등 지방이전 유인정책 강화
 - 중소기업개발센터 설립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 전통 향토산업 육성, 지원 강화
 - 기초 지자체의 향토산업 1개씩(1地1業 운동) 발굴·육성
 - 産學研官 연계, 기술개발·인력양성·판로개척 등 지원
- 소상공인·재래시장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충
 -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
 - 재래시장 현대화
 - 대형마트의 증소도시 입점 합리적 규제

Ⅱ. 사회·복지분야

기본정책
1

여성·가족행복, 사회안전강화로 국민행복을 이루겠습니다.

○ 핵심내용

-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보호망 구축
- 여성의 건강·안전강화와 노년층 보호
- 재난관리·사회안전·응급의료·산업재해 예방체제 구축
-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육성

○ 상세내용

- 출산장려 국가지원 확대, 보호망 구축
 - 보육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 국가가 책임
 - ‘출산안심-육아안심’ 위한 국가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드림스타트’계획 추진
 - 교육, 의료, 복지 등 종합보호시스템 구축

- 여성의 건강·안전강화와 노년층 보호
 -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제도 강화
 - 여성건강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 가족 지원
 - 100세 시대, 어르신들 3고(질병, 가난, 고독) 해결
- 재난관리·사회안전·응급의료, 산업재해예방체제 구축
 - 재난구조 시스템 선진화와 전문인력 양성
 - 응급의료시스템 U-Health 등 도입
 - 놀이터 안전시설 기준 강화
 - 선진산업시스템 구축
-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육성
 - 영상, 게임, 음악, 방송의 국제경쟁력 확보
 - 민간·공공체육시설정보의 전국적 통합 및 활용

기본정책
2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연령별·성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 제공
- 예방적 복지 실현 및 보건서비스 실시
- 일하는 복지 달성으로 빈곤층 자립강화
-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의 질 향상

○ 상세내용

- 맞춤형복지 제공
 - 수요자 맞춤형 개별급여 보장체계 도입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
 - 기초생활보호 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맞춤형 보건서비스 실시
 - 의료급여 수혜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 진료비 상한제에 비급여 항목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 예방적 복지 실현
 - ‘자원봉사저축제도’ 실시
 - 장애아동 보호자 연금 납부하고 보호자 사망시 연금 지급
 - 임금피크제 통한 정년연장
 - 치매예방 강화
- 일하는 복지 달성
 - 빈곤층취업 교육 우선배려 기관에 인센티브, 표창, 인증서 부여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일정기간 급여 지급하여 탈빈곤을 유도
-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물·길·집 개선
 - 고령 및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봉사제도 획기적 개선

Ⅲ. 교육·환경분야

기본정책
1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프로젝트
 -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5대 프로젝트
 - 대학강국 5대 프로젝트
 - 과학기술강국 건설 5대 전략 및 2대 핵심프로젝트

○ 상세내용

-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프로젝트
 - 출산에서 취학까지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 빈곤층 영유아를 위한 질높은 육아, 드림스타트 프로젝트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 ① 고교 다양화 300
 - ② 영어 공교육 완성
 - ③ 3단계 대입자율화
 - ④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 ⑤ 맞춤형 학교지원
- 대학강국 5대 프로젝트
 - ① 대학관치 완전 철폐
 - ②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③ 2060 평생학습 플랜
 - ④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 ⑤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 과학기술강국 건설
 - 5대 전략
 - 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 ②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 ③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④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여 창의력 발휘 보장
 - ⑤ 과학기술의 국민대중화
 - 2대 프로젝트
 - ①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건설
 - ② 신에너지 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

○ 핵심내용

-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경제적 효율성(개발)과 사회적 안정성(보존) 조화
- 국토보전의 통합성과 생태적 다양성의 유지
- 국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환경선진국 건설

○ 상세내용

-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그린 앤드 크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전국 방치 쓰레기 대청소
 - 북한 산림 황폐지 조림 사업 적극 지원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사전예방 원칙을 담은 광역 대기환경관리체계 마련
 - 배출 오염원별 집중화된 관리시스템 구축
- 수집, 가공, 재생처리, 판매 및 소비 전단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 식수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및 소비자중심 물관리제도 도입
 - 강력한 상수원 수질 개선 정책과 고도 정수처리 및 상수관 정비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활로 모색
- 경제·환경·복지가 균형 잡힌 정책 개발 체계 구축 및 사회 각 부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구성원 참여방안 마련
-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IV. 정치·행정분야

기본정책 1

법치회복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강화
- 정당한 공권력 강화와 불법행위 엄정대처로 국민불편 해소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정책중심의 책임정치 구현

○ 상세내용

-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보호·법률지원강화
 - 부당한 인권 및 재산권 침해 예방에 주력
 - 민생치안 확보, 유사수신사업 피해사례 등 집중홍보
 - 고리사채 피해자 등 치유 및 희생대책 적극추진
 - 개인회생, 파산절차 및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활성화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 법무종합시설 설치, 무료법률서비스 자원봉사 확대
- 정당한 공권력 강화와 불법행위 엄정대처로 국민불편해소
 - 공권력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불법시위 차단
 - 엄정하고도 예외없는 집행으로 공권력 권위확립
 - 불법시위·점거 등 공공질서 파괴, 민생침해 행위 끝까지 추적 및 의법조치, 손해배상 청구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사회지도층 준법실천 솔선수범
 - 노블리스 오블리제 생활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와 권력형비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정책중심의 책임정치 구현
 - 정경유착의 과감한 청산
 -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및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남용방지
 - 정책중심의 의정활동 추구

기본정책
2

정부의 GLOBAL 경쟁력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정부 구현
- 지방분권의 촉진

○ 상세내용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 R&D, 교육, 환경, 재해예방 집중투자
 - 자유·공정경쟁·책임·위기관리·법치주의 강화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중장기 국정운영 기획기능 통합
 -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 교육·인력개발 기능 연계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고객만족지표 개발 활용
 - 조직·예산·인사교류에 반영
 - 공기업 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 재정개혁 촉진
 - 국민부담 경감,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 극대화, 국가채무 관리강화
 - 공공부문 혁신
 - 기구, 구조, 인사운용 등 방만한 경영 과감한 개혁

□ 지방분권의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행정자치권 실질적 보장
- 자주 세원 우선확충을 통한 재정자치권 강화
- 생활(민생)사범 수사기능보강 등 자치경찰제 확대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자치 개선

- 지방자치 단체 책임성 강화

- 토착비리, 예산낭비, 정실인사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장

V. 외교 · 안보분야

기본정책 1 자원외교, 통상외교, 문화외교를 실용외교 차원에서 전개하여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핵심내용

- MB독트린(비핵 · 개방 · 3000 구상) 실행
- 실용외교(자원외교 · 통상외교, 문화외교) 추구
- 동맹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신뢰성 확보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 상세내용

- MB독트린 실행
 - 북한 핵폐기 결단 →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 · 북일 관계 정상화 → 비핵 · 개방 · 3000구상 가동
 - 북핵폐기 전제로 5대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패키지 지원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투입 → 10년 후 북한 국민소득 3000불 달성
- 실용외교 추구
 - 자원외교 강화, '에너지 실크로드' 개척 등 국가간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통상외교를 통한 경제적 실리추구
- 전 세계적인 FTA망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상호개방과 교류를 향한 문화외교 지향
- 동맹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신뢰성 확보
 -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미래전략 추진
 - 주변 강대국과의 우호 친선관계 지속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 ODA(공적개발 원조) 확대, 국제적 위상 강화
 -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 구현 및 대 아시아외교 확대

기본정책
2

안보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 국방력의 질적 강화를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
-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체제 강화
- 국민의 신뢰받는 군 위상 구축과 예비역 지원

○ 상세내용

-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 4강과의 국제공조 강화
 - 실천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군 구축
-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북억지력 확보
 -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점진적 국방비 증액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 첨단미래전 대비한 전력증강
 - 동북아 세력균형유지 역할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체제 강화
 - 한반도 군사위기 상황에 대비, 우방국과 군사협력체제 강화
 -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플랜' 작성
- 국민의 신뢰받는 군위상 구축과 예비역 지원
 -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한 병역판정감시의 강화
 - 병무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로 제대군인 지원 강화
 - 존경받는 군인상 정립과 군 문화풍토 조성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I. 경제 · 민생분야

기본정책 1

작은 정부

○ 핵심내용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규제 완화,
- 세금 감면, 재정 건전성 제고

○ 상세내용

- 국가관리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민간주도의 시장 경제를 뒷받침한다.
-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
-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

기본정책 2

과감한 개방

○ 핵심내용

-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자유무역협정 추진, 적극적인 국제공헌

○ 상세내용

- 과감한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발전시킨다.
- 자유무역협정과 영어공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적극적인 국제공헌으로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Ⅱ. 사회·복지분야



○ 핵심내용

- 지속가능한 복지 추구, 4대보험제도 개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 우선정책, 보육시스템 확대·개선

○ 상세내용

-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4대 사회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한다.
- 복지 공급체계를 개혁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둔다.
- 보육시스템을 확대·개선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정책
2

공동체를 통한 신뢰구축

○ 핵심내용

- 핵심공동체 복원,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 확산, 지도층의 윤리의식 제고

○ 상세내용

- 가족과 학교 등 핵심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을 함양한다.
- 공동체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질서의 정착에 필요한 소양을 북돋운다.
-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를 확산시켜 국가의 정신적·윤리적 토대를 강화한다.
- 지도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수준을 높인다.
- 정부는 자발적 공동체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Ⅲ. 교육·환경분야

기본정책
1

공교육 혁신

○ 핵심내용

- 교사주도 공교육 개혁, 학교 자율권 보장, 평준화 교육 보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상세내용

- 교사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 교사의 대폭 증원, 교사의 처우 및 능력개발 기회 확대, 교원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폭 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평준화 교육에서 다양성과 수월성 증진 교육으로 전환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기본정책
2

친환경사회

○ 핵심내용

-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단계별 수질 관리체계 구축

○ 상세내용

-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을 원천 차단한다.
-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 한다.

IV. 정치 · 행정분야

기본정책
1

획기적 분권

○ 핵심내용

- 획기적 지방분권, 경제, 교육, 경찰, 행정, 복지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구성,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프라 지원

○ 상세내용

- 획기적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지방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 및 행정의 단위가 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정부는 경제·교육·경찰·행정·복지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접 국제화·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 향상을 추구한다.
-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프라 마련을 통해 지방정부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정책
2

법질서의 확립

○ 핵심내용

- 국민의 법의식 제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사회기강 확립

○ 상세내용

-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제고한다.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과세, 사회지도층의 윤리 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한다.

V. 외교 · 안보분야

기본정책 1

남북관계 재정립

○ 핵심내용

- 북한의 정상국가화,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정책, 대북지원과 경협을 북한핵 폐기와 연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추구

○ 상세내용

-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고 오는 남북관계로 재정립한다.
-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대북 지원과 경협을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연계한다.
-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기본정책 2

한·미동맹과 외교다변화

○ 핵심내용

-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발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 적극 참여와 외교 다변화

○ 상세내용

-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지향한다.
-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외교를 다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

I. 경제 · 민생분야

기본정책 1

성장산업 육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1000만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핵심내용

- IMF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고용 창출, 서민경제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상세내용

-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환경 관련 업종, 부품소재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은 고용문제를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보육, 요양, 방과 후 교육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영세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협업 생산체제 구축과 환경 친화적 농업 전환 등을 통해 농업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영세 서비스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클러스터 육성하여 브랜드 개발 및 기술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특히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당사자들의 이해와 사회적 관심 및 지원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연대임금제 등을 통해 우선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본정책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를 통한 서민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부유세 도입을 비롯한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통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대기업에 귀속되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주거비가 상승하였습니다.
- 또한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임금소득이 줄어들고, 수출중심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등 소득과 자산이 점차 서민으로부터 대기업, 자산가,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는 침체되고 성장률은 저하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내수를 창출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서민의 소득 및 자산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택지 국유화를 통한 반값 부동산을 실현하여 서민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 또한 서민금융기관 설립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부유세·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나아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서민의 인적자본(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혁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Ⅱ. 사회·복지분야

기본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확대, 비정규직의 확대 및 여성근로자의 저임금·비정규화,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계층 간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심각한 빈곤화 문제를 사회보장체계의 보장성 강화 및 대상범위의 확대, 공공부조의 제도 개선 및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 및 근로빈곤층을 확대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비정규직화 현상을 가져와 사회전반에 걸쳐 중관계층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들은 하위계층으로 편입되면서 소득양극화는 물론 빈곤층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관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미숙한 수준이며,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 역시 수급자의 2배가 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은 선정기준과 비현실적인 보장수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시켜서 가족의 동반빈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보장체계의 한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현실화하고, 대상 및 비수급빈곤층을 확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기본정책 2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영국이나 스웨덴, 대만처럼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재원은 부유세 등으로 조달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의료는 주거, 교육과 함께 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병원 이용 시 과도한 본인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민간중심의 비용 낭비적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가파른 의료비 상승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한미FTA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병원자본과 의료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영국이나 스웨덴, 대만처럼 무상의료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상의료에 소요되는 재원은 부유세, 사회복지세 신설과 군축, 누진적 건강보험료 개편 등으로 조달하겠습니다.

Ⅲ. 교육 · 환경분야

기본정책 1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사교육비, 입시, 학벌사회는 교육의 3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평준화로 3적을 해결하겠습니다.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으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전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고질적인 대학입시경쟁, 일류대 출신만이 우대받는 전근대적인 학벌사회는 한국교육의 3적(敵)입니다. 그리고 이 3적은 대학서열체제의 세 가지 외피입니다. 좁디좁은 일류대 관문이라는 병목현상 때문에 발생한 병폐입니다.
- 병목현상은 길을 확장할 때 사라집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평준화로 3적을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으로 확충하고 균등하게 지원하여 대학들 사이의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 정책으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환경이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기준이 되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대학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전형과 1974년의 고등학교 평준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입시, 사교육비, 학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두 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대학입시경쟁, 그로 인한 사교육비, 학벌문제를 풀 때입니다.

기본정책 2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ی겠습니다.

○ 핵심내용

- 기후변화 위기와 석유고갈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력소비의 20% 감축,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1990년과 대비하여 무려 104.6%나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2013~2017년)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산업 및 사회전반이 받을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IV. 정치 · 행정분야

기본정책 1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정치개혁의 핵심은 서민의 참여와 이익을 보장하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풀뿌리 정치참여 활성화,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정당의 기초조직과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대통령은 임기 중에 절대로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 평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투표소, 사전투표제 등을 도입하여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무원칙한 짝짓기, 금권과 지연에 얽매이는 낡은 정치관행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당이 자신의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뚝뚝이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 이를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의석을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는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본정책
2

새로운 공화국,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건설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진보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 중심이 되는 평등한 사회, 통일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용

-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척되었다하나 아직도 노동자 농민등 서민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고, FTA 추진에서 보여지듯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청산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새세상이 될 진보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나아가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룩된 통일된 사회 △ 사람중심, 노동주도의 경제로 경제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 △ 농민이 주인되어 농업을 희생시켜 활기찬 농촌이 실현된 사회 △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 실현된 사회 △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 아이들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V. 외교·안보분야

기본정책
1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당당한 외교로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당당한 외교를 향한 첫 출발점입니다. 동맹해체 후 비동맹다자주의에 기초해 호혜평등을 지향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상세내용

-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구조와 특성상 한미동맹에 기초한 다자외교 추진전략은 성공할 수 없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패권전략에 부합하는 한반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외교 전략은 비동맹다자주의입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와도 어떤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외교 전략만이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어느 특정국의 이해관계에 편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으며 비동맹다자주의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는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호혜평등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정책 2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	--

○ 핵심내용

- 한국경제 발전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FTA를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를 대신해 동아시아 국가 간 금융협력, 투자 및 무역관리, 중소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 경제위기 시 위기대응(금융세이프가드), 광우병 쇠고기와 같은 식품안전 등 국가의 민생·위기관리 능력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 또한 한국의 산업 편중도와 경제적 대외의존성을 높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근거리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을 체결하여, 동아시아 경제가 공동 번영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협정은 아시아통화기구(AMF)설립, 투기자본 통제를 위한 토빈세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사회적 책임투자지대 설치, 과학기술 교류 및 이전, 중소기업 네트워크 설립, 사회적 기업 육성, 노동 및 인력교류 등을 내용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

I. 경제 · 민생분야

기본정책 1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 창출

○ 핵심내용

- 일자리 특별법 제정,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
-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 확대전환을 위한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 상세내용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해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를 제도화하여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추진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 확대전환을 위한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 해외 인력진출 확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KOICA 확대 개편

기본정책 2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핵심내용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음
- 기술개발 외에 기술의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지원하며, 대기업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기타 제반 제도의 개선을 추구

○ 상세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 학습고속도로 :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수출고속도로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KOTRA 해외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금융고속도로 :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부 신설
 - 정보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을 위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로 인하
 - 소상공인 공제사업 1,000억 원 지원
 -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Ⅱ. 사회·복지분야



○ 핵심내용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음
- 자산양극화 축소를 목표로 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과 선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 서민을 위한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투기배제형으로 추진

○ 상세내용

-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신도시 건설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가 반값이 됨. 거기에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 반값이 됨.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하도록 의무화.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신도시공영개발: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투자.
-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으로 허용함.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음

기본정책 2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핵심내용**

-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연계해 건강관리체계 구축
-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 폐지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 **상세내용**

-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 것임 : 연령차별 금지와 정년 폐지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무각출 1인1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도로 출범

Ⅲ. 교육 · 환경분야

기본정책 1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핵심내용**

- 교육 기회균등 극대화와 창조교육을 통해 교육강국 실현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하여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기회균등 선발제 전면 확대 시행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를 위해 학교 내 다양성을 위한 자율형 공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대학입시제도와 내신제도를 혁신

○ 상세내용

-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음.
- 학교를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으로 변모 시킬 것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세계적 지역화 추진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실시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모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 체제를 도입

기본정책
2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 핵심내용

-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 의무국가 포함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단계별 정책 추진
-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생태·환경파괴 방지법」을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생태적 안정성 추구를 가능토록 함

○ 상세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제어가 가능한 환경세로 전환
- 녹색경제를 지원하여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 참여 인센티브 통해 현재의 에너지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단계적 전환: 화석연료 비중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하여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하게 상향 조정 달성
 -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중교통망과 자전거도로 확충,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

IV. 정치 · 행정분야

기본정책
1

공직부패추방

○ 핵심내용

- 부패 없는 공직사회로 선진 국가 구현
-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종 입법의 조속한 통과, 합리적 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의 체계화를 이루어 가겠음

○ 상세내용

-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 :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법기관화(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렴위의 연구조사 기능 흡수)
-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
 -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 :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는 법 제정
-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blind trust)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 부동산 백지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화
-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련법 제정
 -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

기본정책
2

지역감정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 핵심내용

-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함
- 하드웨어 위주의 균형발전투자에서 사람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전환
- 관료위주의 사업추진에서 시민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추진

○ 상세내용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이 차질이 생기고 그 추진동력을 잃게 된 근본원인의 하나는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지위와 위상이 낮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임
- 따라서 중앙부처의 기능조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부처 설치(부총리급의 국가균형원 또는 국가균형발전부)

- 정책기획 및 평가기관에 순수한 외부전문가들이 참가하도록 함
- 건물, 시설 등 하드웨어형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교육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혁신체제 구축
- 균형발전사업의 기획과 집행에서 관료위주를 벗어남으로써 지역 산·학·연과 지역시민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원

V. 외교·안보분야

기본정책 1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확립 추진

○ 핵심내용

-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병행 발전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
- 실리적인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

○ 상세내용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확립의 동시 추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제 구축

○ 핵심내용

-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 도모

○ 상세내용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의 추진 확대
- 국제기구, 특히 아시아관련 국제기구의 한국유치 적극 추진
-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I. 경제 · 민생분야

기본정책 1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인하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 상향
-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 대폭 감면
- 부동산투기 요인 통제시스템 구축

○ 상세내용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장기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다만, 탈규제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인세는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유치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별화 하겠습니다.

기본정책
2

광역경제권 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수도권을 첨단지식산업 중심 경제권 구축
- 7대 광역 경제권 건설과 신성장 동력산업육성기반 구축

○ 상세내용

- 수도권의 규제는 도시형 첨단지식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수도권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역을 구축하여 규모경제(Scale Merit)의 효과를 이루겠습니다.

Ⅱ. 사회·복지분야

기본정책
1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 '책임교육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상세내용

-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안정, 교육, 의료 문제 등을 일괄 해결하겠습니다.
-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저속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 흐름에 부합한 고소득 안정직업을 창출하겠습니다.

기본정책 2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권리기반 패러다임)
- 장애인을 사회주류 구성원으로 구축
-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

○ 상세내용

-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특수교육예산의 독립된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과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보장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Ⅲ. 교육·환경분야

기본정책 1

지속가능한 환경중심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국제기준의 지속가능한 ‘국가종합환경시스템’ 구축
- 환경유발요인과 대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기구 설치

○ 상세내용

- 지구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제기준의 지속가능한 ‘국가 종합환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환경유발 요인에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정책 2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방과 후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 확대 추진
-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 편차 개선

○ 상세내용

- 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IV. 정치 · 행정분야

기본정책 1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장기적 국가 발전계획 추진 가능한 개헌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 상세내용

-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새로운 국가 도약 기반 구축

기본정책 2 전국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구역 개편
- 국가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행정구역 개편
- 지방분권을 신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 상세내용

- 국민의 생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역간 규모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지방분권을 신장할 수 있는 형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V. 외교 · 안보분야

기본정책 1 대북경제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핵심내용

-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한 대북지원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계한 대북지원
- 무조건적 경제지원 중단

○ 상세내용

- 대북경제지원은 경제지원에 걸맞은 인권문제, 삶의 질 개선 등이 수반되도록 추진한다.

FTA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 핵심내용

- 한미 FTA 조속한 비준
- 한 EU FTA 촉진등 FTA의 단계적 확대 촉진

○ 상세내용

- 새로운 경제도약과 글로벌경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FTA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간의 FTA는 조속히 비준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의 10대 선거공약

◆ 통합민주당

10대 선거공약	비 고
I. 경제 · 민생분야	
1. 일자리 창출	
2.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 주름살 제거	
II. 사회 · 복지분야	
1.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검진 국가관리 및 노인 · 여성 · 어린이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2. 일도 함께, 돌봄도 함께, 국가 운영도 함께하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실현	
III. 교육 · 환경	
1.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등록금 공제제도 및 물가연동제 도입	
2. 기후변화 대책 수립으로 효율적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환경산업육성으로 환경선진국가로 도약	
IV. 정치 · 행정	
1.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청렴도 및 국가 투명성 세계 10위	
2. 지방 행정 및 재정 구조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편리하게 개편	
V. 외교 · 안보	
1. 평화창조자로서 국가의 위상제고와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과 남북, 대륙을 통합	
2. 2012년까지 유급지원병제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의무예비군제도를 준상근형태의 지원예비군제로 전환	

◆ 한나라당

10대 선거공약	비 고
I. 경제 · 민생분야	
1. 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넓히겠습니다.	
2. 서민경제, 자영업자 고달픈 생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3.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II. 사회 · 복지분야	
1. 나라의 뿌리, 농어업 · 농어촌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2.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III. 교육 · 환경	
1.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2. 선진국 수준의 생활문화환경을 만들겠습니다.	
IV. 정치 · 행정	
1. 지방과 수도권, 상생하겠습니다.	
2.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V. 외교 · 안보	
1.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10대 선거공약	비 고
<p>I. 경제 · 민생분야</p> <p>1.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p> <p>2.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p>	
<p>II. 사회 · 복지분야</p> <p>1. 건전하고 반듯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p> <p>2.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p>	
<p>III. 교육 · 환경</p> <p>1.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2.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p>	
<p>IV. 정치 · 행정</p> <p>1.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고 완전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p> <p>2.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을 살리겠습니다.</p>	
<p>V. 외교 · 안보</p> <p>1. 한반도 주변 국가 외교 강화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p> <p>2.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p>	

◆ 민주노동당

10대 선거공약	비 고
<p>I. 경제 · 민생분야</p>	
<p>1. 한학기 150만원 등록금을 실현하여 등록금 부담을 덜겠습니다.</p>	
<p>2.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p>	
<p>II. 사회 · 복지분야</p>	
<p>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켜내고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겠습니다.</p>	
<p>2.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III. 교육 · 환경</p>	
<p>1.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원수강료 상한제 의무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p>	
<p>2. 대운하를 저지하여 환경을 지키겠습니다.</p>	
<p>IV. 정치 · 행정</p>	
<p>1.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국회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p>	
<p>2. 정당정치 활성화와 비례대표 확대를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p>	
<p>V. 외교 · 안보</p>	
<p>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미동맹선언을 저지하겠습니다.</p>	
<p>2. 남북공동경비군 창설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습니다.</p>	

◆ 창조한국당

10대 선거공약	비 고
I. 경제 · 민생분야	
1. 비정규직 해소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2. 중소기업부 신설 쟁취	
II. 사회 · 복지분야	
1. 무주택자 마이홈 지원 법제화	
2. 공약 1)과 2)의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에 기초한 공공 복지제도의 확충	
III. 교육 · 환경	
1.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및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2. 경부운하 저지로 환경대재앙 예방하고 녹색경제 실현	
IV. 정치 · 행정	
1. 거품건설비 절감액 년 15조원(공공예산) 교육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입	
2.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 확대	
V. 외교 · 안보	
1. 북한 핵폐기와 북미수교의 동시 진전	
2.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친박연대**

10대 선거공약	비 고
I. 경제 · 민생분야	
1.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인하하겠습니다.	
2. 광역경제권 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II. 사회 · 복지분야	
1.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III. 교육 · 환경	
1. 지속가능한 환경중심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2.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방과 후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IV. 정치 · 행정	
1.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2. 전국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V. 외교 · 안보	
1. 대북경제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2. FTA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I. 정당별 10대 선거공약

I. 경제 · 민생분야

공약
1

일자리 창출

○ 핵심내용

- 6%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고용 중심 성장전략을 통하여 연간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지속가능한 6% 경제성장
 - 방송통신융합IT,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 대기업과 함께,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첨단기업 1000개 유치
 - 국가균형발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연간 50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 강한 중소기업, 新성장동력,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으로 1% 성장시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노인요양보험 본격실시, 무상보육확대, 학급당 인원 25인으로 축소 등을 통해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준 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년의 취업 지원 역량을 배가해서 취업 소요기간을 1/2로 단축
- 2012년까지 직업훈련 수혜율을 현 13.5%세 40%까지 개선
- 고용보험 수혜율 2012년 60%까지 개선하여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수급 보장

○ 핵심내용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2.5~3.5%) 내로 물가를 안정시켜 교육비, 유류비, 통신요금, 카드수수료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들의 가격 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 상세내용

□ 물가안정

- 통합민주당 장바구니물가지수 개발(쌀, 라면 등 30개 생필품 중심)
- 전력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도로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공공요금 상한제 실시
-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최대한 억제
 -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인하
 - 곡물, 철광석 등 원자재를 거래하는 상품선물거래소 설치
-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 경감
 -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원할 것과 농협의 비료취급 수수료(3~4%) 환원 촉구
 - 저리(연리 3~4%, 상환기간 1~2년)의 사료구매자금과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설치로 축산농가 지원
- 등록금 인상 억제
 -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 도입하고 대출이자율은 5%대로 하향 조정하며 등록금 인상 물간연동제 실시
 - 등록금 공제제도 도입을 통하여 무이자·2%·4%대의 저리대 출제도 마련

□ 서민생활비 줄이기

- 이동통신 요금은 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 유도
- 유류가격 인하
 - 시민, 정유사,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유가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송용 유류세 10% 추가

- 인하 및 버스·화물차에 대해서도 유류세 면세 추진
- 카드수수료 심의위원회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현금서비스의 수수료 상한선을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비급여 통제, 포괄수가제 도입, 약값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하여 약값 및 진료비 인하 추진

Ⅱ. 사회·복지분야

공약
1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검진 국가관리 및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핵심내용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특정질환 검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기본 치료비 국가 지원
-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관리 목표 설정

○ 상세내용

-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
 -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 초등학생을 위한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 지원
 -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 지원
 -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 노인 건강 :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강화, 고령 근로자 건강보호
- 여성 건강 :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

- 어린이 건강 : 고위험 신생아 관리, 어린이 손상 예방, 취약아동 지원,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
- 장애인 건강 :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정신질환자 건강 :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 급성기(초발)환자 서비스 접근성 향상, 부적절한 만성장기입원 억제 및 재원기간 감소,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인식개선
-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 고용허가제 MOU체결 도입국 확대, 중국동포 및 고려 한인 정책 개선, 이주결혼 가정정책 개선

공약
2

일도 함께, 돌봄도 함께, 국가 운영도 함께하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실현

○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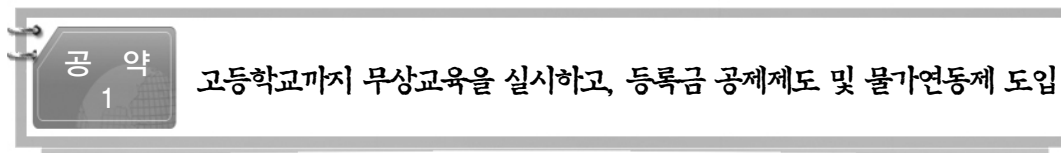
-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돌봄노동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 정치·행정 등 사회 각 분야 여성참여 확대

○ 상세내용

- 고용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마련, 성별 임금차별 개선
- EBS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및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등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 확산
 - 주5일제(주40시간제) 시행 확대 및 총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공직선거에서의 여성 진출 적극 지원
 - 지역구 여성 30% 공천 시 정당 국고보조금 30% 증액 지원
-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06년 5.4%에서 '12년 15%로 확대
- 교육 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 국공립대 여교수채용목표제 추진 : 2012년까지 20% 이상 확대
 -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 확대 : 12.8%('06)→20%('10)→ 30%('15)
- 관리직 여성임용목표제 도입, 비상임 이사 여성 30% 할당 등 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 스포츠분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Ⅲ. 교육·환경분야



○ 핵심내용

- 정부주도의 영어공교육 확대 등을 통한 사교육비의 절감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 국가장학제도 확대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부담 등 보통교육은 국가가 책임

○ 상세내용

-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기본형 보육료: 1일 5시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현 표준보육 비용의 80% 수준)
 - 종일형 보육료: 1일 12시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현 표준보육 비용 수준)
-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활용, 영아(만0세~2세)를 위한 가정보육 활성화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2012년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들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점차 민간보육시설로 확대
- 평가인증제도 정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부담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 (2007년 기준)를 정부지원 300만원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확대
- 정부보증 무이자 및 저리용자금 대출확대 :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통한 무이자·2%저리, 4%대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등록금 걱정해소
- 등록금 인상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공약
2

기후변화 대책 수립으로 효율적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환경산업육성으로 환경선진국가로 도약

○ 핵심내용

- 범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 수립, 이행
- 동아시아 지역 및 전 지구적 차원의 지구온난화 대책 수립과 참여
- 세계 과학기술공동체에서 한국 과학기술계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국격(國格) 제고

○ 상세내용

- 기후변화 완화대책 수립
 - 정확한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구 온실 기체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이행
 - 탄소 배출량 표시제 도입 등 지구 온실기체 감축을 촉진하는 법제의 제도화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국토개발계획 시행과정에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기상영향 평가제의 도입, 홍수와 가뭄 등 재해지도 작성과 기상재해 대책의 정비
 - 아열대성 전염병 증가에 따른 방역체계 구축
 - 농작물 생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품종 개량

- 재해 대비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축 기준 마련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시스템 수립과 시행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incentive) 강화
- 생태위기 대응 과학기술개발로 환경국가의 선도자로 도약
- 포스트 탄소경제시대를 견인할 신재생·대체에너지 개발
- 원자력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이용률 제고

IV. 정치·행정분야

공약
1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청렴도 및 국가 투명성 세계 10위

○ 핵심내용

-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으로 상향 조정
- 고위 공직자 부정을 상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상세내용

-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
-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제고
-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과 차명거래자의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의 사면·복권 제한과 경과기간 신설
- 부정부패 관련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기소법정주의 도입,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시민기소제도 도입, 대선후보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확대
-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나 경영자에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제도 도입
- 변호사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변호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

○ 핵심내용

- 행정 분권,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등 자립형 지방분권 정착
-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효율성에 부응하고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하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적정화’, 즉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 상세내용

- 행정분권 차원에서 국가사무를 기능위주로 지방이양하고 지방의 책임성 확보
 -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임기제 실시
 - 지방감사위원회 설치, 시민감사관제도 확대, 지방의회의 감사권한 강화
- 재정분권차원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자주재원 비중 확대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 세목교환 등 지방세원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 자치입법 강화 차원에서 조례제정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조례제정권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도화
- 지방행정구조의 개편
 -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구역을 주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재편성
- 지방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제도 개선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 기초단체장 선거 후원회제도 검토
 - 지방의원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V. 외교 · 안보분야

공약 1

평화창조자로서 국가의 위상제고와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과 남북, 대륙을 통합

○ 핵심내용

- 한미관계의 전략적 중시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국익 추구
-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 대한민국을 국제 물류산업강국으로 육성

○ 상세내용

-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
- 주변 4강 및 EU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 6자외무장관 회담 정례화 및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발전
- APEC, ASEM 활동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기반 마련과, 한반도 평화번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
-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
- 경의선과 동해선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원선 조기복원을 통해 남북육상 교통시대 개막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열차를 계기로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고, 경원선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추진
- 5대철도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남북·대륙 통합 추진
 - 남북축 대륙철도, 수도권 급행철도, 영호남 화합철도, 강원도 성장철도, 지역별 연계철도 구축

공약 2 2012년까지 유급지원병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의무예비군제도를 준상근형태의 지원예비군제로 전환

○ **핵심내용**

- 2012년까지 5만 정예 유급지원병 양성
- 사병 복무기간을 2년 앞당겨 2012년까지 18개월로 단축
-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상근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 민방위제도를 폐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편성체제만 유지

○ **상세내용**

- 2012년까지 정예 유급지원병 5만명 확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인원	2,000명	5,000명	10,000명	15,000명	25,000명
인원누계	2,000명	7,000명	17,000명	30,000명	50,000명

-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2008년 하반기부터 월 단위로 군 입영자의 복무일수를 2~3일씩 단축하여 2012년 말 입영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 예비군제도 개선은 2012년까지 예비군의 복무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예비군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18대 회기 중 단위부대의 시범실시와 평가
- 민방위제도 개선은 위 예비군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종합 점검하여 재난 대비 위주의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

정당별 10대 선거공약

I. 경제 · 민생분야

공약 1

좋은 일자리 창출로 증산층을 넓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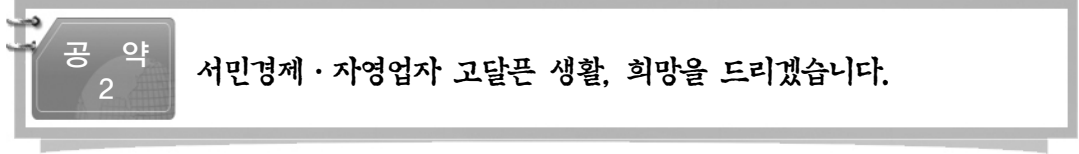
○ 핵심내용

-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 내집 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 상세내용

-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 규제완화, 세율인하, 노사안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 의료·교육·복지·금융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 4대 보험료 등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실현
 - 노인·여성·장애인 맞춤형일자리 개발 교육·취업 일관지원체제 구축
-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 서민 6대생활비 절감
 - 공공요금 부담 줄이기

-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 자녀 세액공제제도 신설
- 내집 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 서민 주택구입자금 10%로 내집 마련 가칭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
 - 서민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보육·사회안전·교육·노인복지시설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 핵심내용

-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 상세내용

-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
 - 공공부문 취업, 계층할당제 도입
 - 저소득층 연탄 가격인상분 지원
 - 영유아 통합서비스 강화한 드림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자녀 교육기회 확장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 지방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 배정, 자율형 사립고 저소득층할당, 장학금지원 등 ‘교육복지’ 실현.(우수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대한 교육기회 보장)
- 영세자영업자의 고충, 덜어드리겠습니다.
 - 생계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 생계형 서민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영세자영업자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소상공인 공제제도 정부출연금 지원 대폭 확대
- 재래시장 현대화 예산 지원 확대
- 사회소외계층, 보살피겠습니다.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
 - 서민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취급 확대
 - 연체 고금리 사채 대책 및 불법추심방지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법적 지원 대폭 강화

공약
3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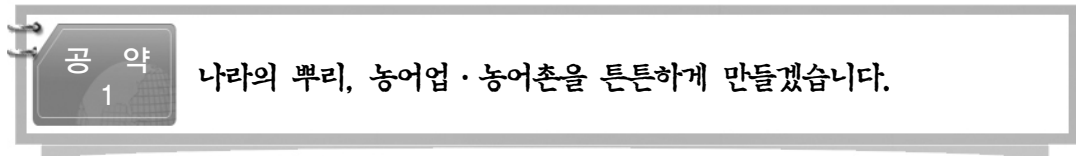
- 국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 자금조달 쉬워집니다.
-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납품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 마케팅과 해외진출, 지원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국가 경쟁력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 기본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범부처적 지원체계)
- 자금조달 쉬워집니다.
 -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지적재산권까지 확대
 - 미래성장가치 위주 자금지원
 - 성장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 벤처캐피탈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법인세율 및 최저한 세율 대폭 인하
-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납품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 원자재가-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 마케팅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공공부문 등)
 -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II. 사회 · 복지분야



○ 핵심내용

- 선진농어업정책, 글로벌화 하겠습니다.
- 농어촌 생활수준, 높이겠습니다.
- 농어민 살림, 보호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선진농어업정책, 글로벌화 하겠습니다.
 - 친환경·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
 -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 클러스터 조성
 - 한계농지 거래 규제 완화
 - 농어촌 EXPO 개최로 도농상생 촉진
- 농어촌 생활수준, 높이겠습니다.

- 상하수도 보급률 2012년까지 70%로 확충
-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 기숙형 공립고(150개) 선정 농어촌에 우선 배치
-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농어촌 뉴타운 조성

- 농어민 살림, 보호하겠습니다.
 -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농어업재해에 대한 선지불·후정산 시스템
 - 비료·농약·사료 등 조세감면 연장
 - 농기계임대사업단 설치
 - 농어민 정년기준법 제정

공 약
2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 실현하겠습니다.
- 국민의 하루하루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가족의 기쁨은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 나눔공동체, 만들어 가겠습니다.

○ **상세내용**

- 맞춤형, 예방형, 통합형 보건복지 실현하겠습니다.
 - 빈곤탈출, 드림스타트, 꿈의 열차를 타고 갑니다
 -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 어르신의 행복 찾아드리기 운동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 국민의 하루하루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 질병고통 없는 건강안정망 구축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 응급·재난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 식품·의약품 안전종합대책 마련
-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 행복한 사회,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 양성평등사회 실현
 -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 가족의 기쁨은 우리의 빛과 희망입니다.
 - 가족사랑문화 캠페인
 -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 안전한 놀이터, 행복한 가족의 휴식공간
- 나눔공동체, 만들어 가겠습니다.
 -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 'Happy Together 카드' 발급 및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Ⅲ. 교육·환경분야

공약
1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 핵심내용

- 공교육 강화 사교육 1/2 축소
- 글로벌 수준 대학자치와 경쟁력
-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 초일류 과학기술국 구축

-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
- 고부가가치 미래환경·에너지산업 상생도모

○ 상세내용

- 공교육 강화 사교육 1/2 축소
 -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 글로벌 수준 대학자치와 경쟁력
 -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 평생학습 체제 전면도입
- 초일류 과학기술국 구축
 -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등 융합기술 발굴
 - 보건·의료·제약 산업의 융합화에 투자 확대
 - 한방·바이오산업 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 강화
- 산업구조와 체질 선진화
 - 제조업의 복합기술융합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 핵심부품·첨단소재산업의 본격 육성으로 대일무역적자 근본개선
- 고부가가치 미래환경·에너지산업 상생도모
 - 글로벌수준의 물 전문기업 육성

○ 핵심내용

-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 노사상생 · 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문화예술의 여유와 기쁨 드리겠습니다.

○ 상세내용

-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 국토 대청소 사업 추진
 -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 노사상생 · 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강화(노인, 장애인, 여성, 지방저학력자, 영세 자영업자 등)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문화예술의 여유와 기쁨드리겠습니다.
 -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 지역문화 산업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 전통문화의 생활화 · 산업화 · 세계화 추진
 -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IV. 정치 · 행정분야

공약
1

지방과 수도권, 상생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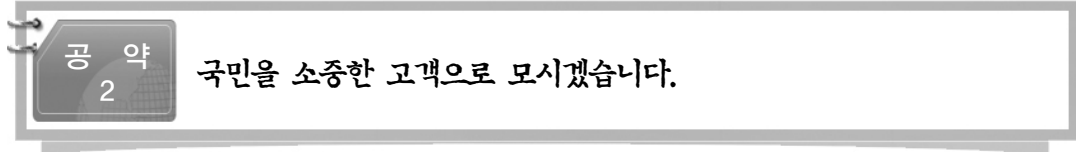
○ 핵심내용

-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 도시서민 삶의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상세내용

- 지방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 자치단체장에게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중앙정부의 장기임대공단 설치 지원, 허브 지방대학 지원, 특화산업 추진
 - 내륙지방 경제자유구역지정 확대
 -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4대 지방자치권 보장
 - 지역별 과학기술 클러스터(Cluster)와 R&D 허브 구축
 - 지방재정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통한 민자유치 확대
 -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 지방기업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 지방기업에 금융 세제지원 확대, 연기금등 지방으로 자금환류
 - 지방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 우수기업 지방투자 촉진
 - 향토산업발굴을 위한 「향토산업육성특별법」 제정
- 수도권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합니다.
 -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 조성
 - 외국기업과 국내대기업의 차별폐지
 - 수도권 낙후지역 지나친 규제 합리화
 - 친환경 수도권 광역교통망체계 개선

- 도시서민 삶의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임대자금 저리융자
 - 서민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 핵심내용

-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응급의료, 선진화하겠습니다.
-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 상세내용

-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 알·깨·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공기업 민영화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
- 재난 및 안전관리·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하겠습니다.
 -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 재난 예방·복구·사후관리의 전문화
 -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 공직자 부패 척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체제 강화
 - 불량식품·어린이 유괴·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범죄에 대한 강력한 예방 체제 구축

V. 외교 · 안보분야

공약
1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핵심내용

-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 상세내용

- 한미동맹, 회복하겠습니다.
 - ‘포괄적 한미동맹 미래전략 액션 플랜’ 작성
 -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 동아시아 신외교 협력시스템 구축
- 실용 대북정책,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 인권 개선 노력
 - 비핵·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
 -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
 - 대북지원 모니터링 제도 마련
 -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 첨단국방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투명한 병무행정제도 마련
 - 군 복지 개선(특히 사병, 하급장교 주택 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개정
- 글로벌코리아(Global Korea) 신뢰받는 세계국가가 되겠습니다.
 - 성장동력 창출형 FTA 추진
 - 해외권역별 에너지 벨트 구축
 -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
 -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 국제 NGO 협력 강화

▮ 정당별 10대 선거공약 ▮

I. 경제 · 민생분야

공약 1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비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 핵심내용

-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대폭 감축

○ 상세내용

-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물가안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2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핵심내용

-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10만 핵심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10만 핵심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IT기반 융합기술, 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해양과학 기술분야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임금보조 채용보상제(고용 인센티브제)와 지역별 산학연연결시스템 구축을 통해 젊은층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Ⅱ. 사회·복지분야

공약
1

건전하고 반듯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부정부패행위 처벌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확대

○ 상세내용

- 민생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로소득자에 대해서 과세추징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질 퇴폐문화를 추방하고 미풍양속을 회복시키겠습니다
- 군인,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참전용사,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을 확대하고, 주택분양 비율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공약 2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 핵심내용

-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여성 지원 확대

○ 상세내용

- 편안한 노후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노인의 의치(틀니)를 의료보험 적용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를 확대 하겠습니다.

Ⅲ. 교육 · 환경분야

공약 1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서민층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 상세내용

- 서민층 자녀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대출로 전환하여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시켜 서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대학 장학금을 조성하여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난개발저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문화재 보호법 개정,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저지

○ 상세내용

- 수도권과 낙동강 등 3,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난개발을 저지하겠습니다.
- 국토의 생태계 파괴 등 재앙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한반도의 문화재가 도굴, 수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엄격히 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IV. 정치·행정분야

공약
1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막고 완전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 핵심내용

- 신권위주의적 정치, 신민주독재의 위험성 견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 상세내용

-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신권위주의적 정치, 국무총리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신 민주독재의 위험성을 견제하겠습니다.

- 특정지역 집중의 인사를 막고, 국가인재풀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2

해양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을 살리겠습니다.

○ **핵심내용**

- 해양수산부 부활, 농진청 사수

○ **상세내용**

- 공해 및 주변국과의 해양 관할권 확보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산자원 확보와 해양자원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되살리겠습니다.
- 농업개방에 대비하고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사수하겠습니다.

V. 외교 · 안보분야

공약
1

한반도 주변 국가 외교 강화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한·미간 신뢰회복, 중국과 포괄적 협력 강화,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UN외교 강화

○ **상세내용**

-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맞게 지휘체제와 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는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국가와는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UN 및 민간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
2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투명한 대북 정책 추진

○ 상세내용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라도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북정책 추진체제를 개편하여 관련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Ⅰ 정당별 10대 선거공약 Ⅱ

I. 경제 · 민생분야

공약 1

한학기 150만원 등록금을 실현하여 등록금 부담을 덜겠습니다.

○ 핵심내용

- 등록금상한법제정, 교육재정 확보, 이월적립금을 학교예산으로 전환하면 150만원 등록금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상한선을 고시하고 대학들이 이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한액은 직전 3개년도 가계 평균월소득으로 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입니다. 한학기 150만원입니다.
-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교육비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빈곤층은 전액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며, 일반 학생은 후불제 혹은 선납제에서 선택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한편 위의 두가지 제도를 실시하면서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병행하겠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 부과지수를 적용하여 차등부과토록 하며, 소득 1-2 분위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 정부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늘리며 사립 학교의 재단전입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공약 2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원자재·납품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시간, 품목을 제한하고 대형마트를 현지 법인화해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재벌기업은 오히려 납품가 인하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에 도산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납품가 연동제로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대금미지급, 납품가 횡포)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 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 대형마트를 규제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확산으로 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의 경영 여건은 매출액이 43%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와 같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취급 품목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대형마트를 현지법인화하여 지역 세수를 증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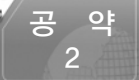
II. 사회 · 복지분야

공약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켜내고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이명박 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건강보험을 비롯해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 상세내용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못하는 병원이 생깁니다. 병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돈 되는 환자만 찾게 됩니다. 또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 영리병원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수호할 것입니다.
- 공공의료를 늘리고 예산을 확대해 현재 10%수준인 공공의료를 50%까지 끌어올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확충 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미용, 성형, 종합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하고 연간 본인부담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대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겠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해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용

-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알맹이가 빠진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등의 차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해 인권실태 조사,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채용과 승진 등에 공직자쿼터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 등으로 학벌과 학력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 이혼과 비혼 가정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등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가족'의 법률상 의미를 확대하고 각종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미가입 국제인권 조약을 즉시 비준하고 각종 유보 조항을 철회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의무고용을 확대, 특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만들겠습니다.

Ⅲ. 교육 · 환경분야

공 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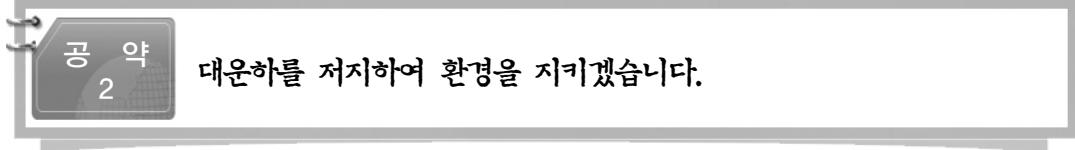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원수강료 상한제 의무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 핵심내용

-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의무화하고 상습적 초과 징수 시 학원등록을 말소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중학생 1명당 매년 20~30만원씩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4000억원의 교육비 부담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전개하여 전액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 학생 당 한달 사교육비 지출이 25만원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수강료가 물가인상율(2.5%)을 훨씬 뛰어넘는 7~8% 오르고 있음. 해마다 15만원 가량씩 상승되고 있는 것. 서민의 사교육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현행 학원법은 상한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 그러다 보니 지역교육감 역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함. 학원법을 개정하여 수강료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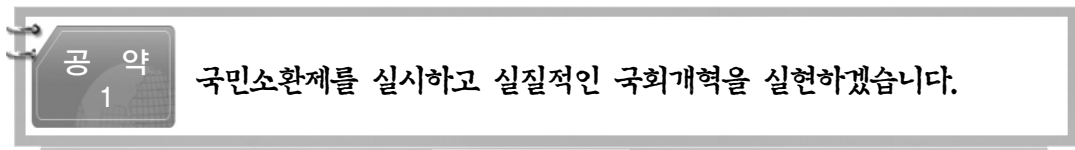
○ 핵심내용

- 대운하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대재앙에 가까움. 대운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상세내용

-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뺐지만 2009년 4월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해당함. 대운하는 물류운송비용 절감 효과도 없으며 환경 개선 효과도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민자유치 역시 손실보전금을 정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이 돈을 내고 ‘썩은물’을 사먹는 결과가 됩니다. 대운하를 백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18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검증, 국민적 차원의 토론을 진행하여 대운하 계획을 실패를 폭로하고 백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IV. 정치 · 행정분야



○ 핵심내용

-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해체하고, 민의 대변과 입법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특혜와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습니다. 자동 폐기 조항 삭제, 윤리 규정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 등으로 윤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겸직금지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며,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강화하고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예결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정부의 정보 및 서류공개 의무화를 강화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을 완화해 상임위 의결로도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 함량미달,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원의 보궐 및 차기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제한하겠습니다.
- 국회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정책제안제를 시행하고 각종 특위와 청문회에 외부 인사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공약
2

정당정치 활성화와 비례대표 확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정치개혁의 핵심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야 극심한 정치부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관행을 결정합니다. 지역구에서 단 1표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념과 정책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에 매달리는 구태정치, 돈 선거가 가능한 부패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의를 왜곡 없이 반영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선거 제도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의 참여정도에 의해 결정됨에도 국민의 실질적 참여 수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동투표제, 사전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여성의 진출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 또 재보궐 선거 책임 정당의 후보 공천을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해 정치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V. 외교 · 안보분야

공약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미동맹선언을 저지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신한미동맹조약은 한미동맹을 더욱 예측화하고 침략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더욱 증가할 것이고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우리 세금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신한미동맹조약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상세내용

-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이미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화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세계 어느 분쟁지역으로든 출동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 만약 이같은 상태에서 신한미동맹선언이 채택된다면 한반도는 세계 분쟁지역으로 출동하는 주한미군의 발진기지가 될 것이며, 자칫 한국군 역시 함께 출동함으로써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더구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전략이 아니라 동맹에서 탈피하고 주변국과의 등거리외교 · 다변화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 한미동맹을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사게 되고 그들 나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신한미동맹선언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 약
2

남북공동경비군 창설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상에 남북공동경비군을 창설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도모하고 남북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남북관계를 외교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적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와 화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잔존하는 서해상에 남북 공동의 경비군이 창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공동경비군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남북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공동활동의 경험은 남북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남북공동경비군은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활동 원칙, 남북 동수 원칙, 남북 공동계획 원칙 등에 의해 운영할 것입니다.

■ 정당별 10대 선거공약 ■

I. 경제 · 민생분야

공약 1

비정규직 해소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

○ 핵심내용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 확대, 그리고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성화된 대책으로는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를 차용한 '프로세스 엔지니어제'를 도입

- 이공계, 경상계 대학생들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돼 방위산업체에 투입되듯이 중소기업에 투입된다면 지역밀착, 현장밀착형 학습형 일자리가 창출됨
- 일단은 10만 명으로 시작해 50만 명 규모로 늘어날 때 진정한 벤처 산업이 육성되고 벤처가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이 가능

공약
2

중소기업부 신설 쟁취

○ 핵심내용

- 중소기업생산성 2배 향상을 위해 독자적인 중소기업 정책수립체제 확립

○ 상세내용

-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가 필요
 -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정부에만 12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음
 - 현재의 중기청은 산자부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2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도 없음
- 따라서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
- 동시에 이를 통해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주요의제로 격상시킴
- 더불어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로 모든 분야의 중소기업 고충을 조속 해결 추진

Ⅱ. 사회·복지분야

공약 1 무주택자 마이홈 지원 법제화

○ 핵심내용

- 자산양극화 축소를 목표로 한 복지정책으로 무주택자의 평생 한번 주택 마련에 대한 국가지원시책

○ 상세내용

- 최근 몇 년 새 서민수입은 뒷걸음질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서민의 내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움
- 평생 한번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민우대 주택자금조달 금리를 실시함
 - 거주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번 연리 3%로 대출
- 동시에 주택공급가격은 낮춤
 -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자산양극화를 축소하고 서민들의 마이홈 꿈이 실현되도록 함

공약 2 공약 1)과 2)의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프로그램'에 기초한 공공 복지제도의 확충

○ 핵심내용

- 소득 양극화의 축소를 목표로, 연금제도 및 의료보장 제도의 공적 보장성 확대

○ 상세내용

-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민생경제를 회생시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결여한 가운데, 연금, 의료 등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공적 보장성을 축소

시키고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소득의 양극화 추세가 오히려 심화될 위험에 처해 있음

- 이에, 창조한국당은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방안'의 작동과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출산율 및 소득의 향상을 주도함을 통해,
 - 전체 노인의 80%에게 전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시켜, (20년 가입 평균 근로자에게)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을 주도할 것임.
 - 참여정부가 주도했던 '의료산업화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의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악 시도에 반대하여, 현재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보장 수준을 OECD 평균치에 근접하는 75%로 확대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진력하는 등 공공성 확대에 치중할 것임.

Ⅲ. 교육 · 환경분야

공약
1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및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 핵심내용

-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입시개혁을 위한 사회협약기구 발족

○ 상세내용

-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공교육이 창의력 함양과는 거리가 먼 지식암기 위주의 입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임
- 더구나 입시관련 사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정부교육예산(2007년 31조원)보다 더 많은 33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따라서 왜곡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가정의 '고통'을 덜고, 아이들을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 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입시방식이 아닌 대학선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이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임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수만명씩 진학함으로써 이로 인해 수조원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의 설치, 지방대학생의 채용목표제 도입, 정부차원의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과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공약
2

경부운하 저지로 환경대재앙 예방하고 녹색경제 실현

○ 핵심내용

- 사람과 환경을 살리자는 국민여론을 앞장서 대변함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건설은 생태·환경·문화의 21세기 가치에 귀를 막은 생태 귀머거리, 환경·생태명에 다름 아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조한국당은 경부운하 저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
 - 홍수 위험 : 홍수 때 남한강 14km와 낙동강 84km 등 모두 98km 구간에서 홍수위가 3~4m 상승해 기존 독을 넘어 범람하게 될 것임
 - 수도권 인구 2,433만명의 식수원 오염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취수원을 북한강 유역으로 옮길 경우 물 부족이 우려되며, 갈수기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수돗물 대란이 예상됨
 - 매장문화재 235개소, 지정문화재 118건을 비롯 문화재 파괴
 - 시설 노후와 토사 퇴적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운하의 비경제성

- 생태계 파괴 : 한강과 낙동강 등 대형 하천이 연결된다면 최악의 생물 재앙이 올 것
- 그 외 지하수 고갈과 안개로 인한 과수, 고추 등 농업홍작
- 따라서 생태적 안정성 수호를 목표로 한 「생태·환경파괴 방지법」을 제정하여 창조한국당이 생태·환경을 최일선에서 수호
- 나아가 녹색경제 지원을 통해 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IV. 정치·행정분야

공약
1

거품건설비 절감액 년 15조원(공공예산) 교육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입

○ 핵심내용

-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임.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제거로 진짜경제 실현
- 시장단가제 실시로 인해 재정사업, 민자사업,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매년 70조원 절약

○ 상세내용

-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1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1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
2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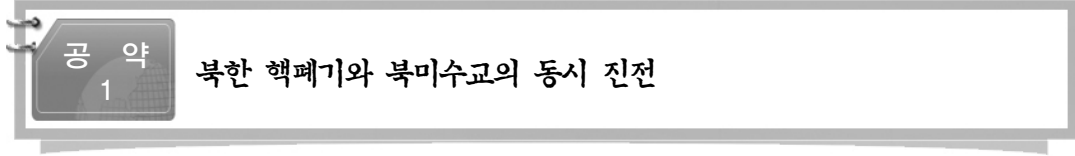
○ 핵심내용

- 지역적 연고가 없는 정책정당, 가치정당은 지역구의원 배출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 각 전문 영역, 여성, 소수자 등의 국회진출을 넓힘으로써 국회의 대의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 상세내용

-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함으로써 지역주의에 편성한 지역의 맹주 정당만 당선자를 낼 수 있음
- 지역구에서 2위, 3위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됨으로써, 소수자의 의사는 국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원주의 사회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원리에도 위배됨
- 지역주의를 배격하는 정치세력이나 양심적인 민주세력의 의회진출이 불가능함
- 따라서 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 지역구 출신 대 비례대표 출신비율을 50 : 50으로 함으로써, 각 전문 영역, 여성, 소수자 등의 국회진출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회의 대의기능 강화

V. 외교 · 안보분야



○ 핵심내용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상세내용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深川),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 핵심내용

- 환서해경제협력벨트에 이어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로 제2의 성장엔진을 만들
-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 북한 문제의 해결 후 북·미간, 북·일간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러시아의 천연자원(천연가스, 석유), 북-일 관계 정상화로 미국과 일본 등으로 부터의 자본, 북한의 인적자원 그리고 한국의 경영능력과 결합하여 동북아 전체에 WIN-WIN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으키는 것

○ 상세내용

- 6자 회담의 틀을 발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고 환동해경제협력벨트 조성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으로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추진
- 동북아의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정당별 10대 선거공약

I. 경제 · 민생분야

공약 1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인하 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 상향
-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종부세 대폭 감면
- 부동산투기 요인 통제시스템 구축

○ 상세내용

- 종합부동산세 면세기준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의 장기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다만, 탈규제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인세는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유치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별화 하겠습니다.

공약
2

광역경제권 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수도권을 첨단지식산업 중심 경제권 구축
- 7대 광역 경제권 건설과 신성장 동력산업육성기반 구축

○ 상세내용

- 수도권의 규제는 도시형 첨단지식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수도권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역을 구축하여 규모경제(Scale Merit)의 효과를 이루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Ⅱ. 사회·복지분야

공약
1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 '책임교육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상세내용

-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안정, 교육, 의료 문제 등을 일괄 해결하겠습니다.
-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저속득층을 위한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시대 흐름에 부합한 고소득 안정직업을 창출하겠습니다.

공약
2

권리기반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권리기반패러다임)
- 장애인을 사회주류 구성원으로 구축
-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

○ 상세내용

-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 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특수교육예산의 독립된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출산 양육과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보장 등 실효성 있는 장애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Ⅲ. 교육 · 환경분야

공약 1 지속가능한 환경중심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국제기준의 지속가능한 ‘국가종합환경시스템’ 구축
- 환경유발요인과 대책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기구 설치

○ 상세내용

- 지구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제기준의 지속가능한 ‘국가종합환경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환경유발 요인에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약 2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방과 후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 확대 추진
-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 편차 개선

○ 상세내용

- 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IV. 정치 · 행정분야

공약
1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장기적 국가 발전계획 추진 가능한 개헌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 상세내용

-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새로운 국가 도약 기반 구축

공약
2

전국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구역 개편
- 국가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행정구역 개편
- 지방분권을 신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 상세내용

- 국민의 생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역간 규모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지방분권을 신장할 수 있는 형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V. 외교 · 안보분야

공약 1 대북경제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핵심내용

-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한 대북지원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계한 대북지원
- 무조건적 경제지원 중단

○ 상세내용

- 대북경제지원은 경제지원에 걸맞은 인권문제, 삶의 질 개선 등이 수반되도록 추진한다.

공약 2 FTA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 핵심내용

- 한미 FTA 조속한 비준
- 한 EU FTA 촉진 등 FTA의 단계적 확대 촉진

○ 상세내용

- 새로운 경제도약과 글로벌경제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FTA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간의 FTA는 조속히 비준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 · 공약 모음집

2008년 4월 일 인쇄

2008년 4월 일 발행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정당지원팀

인쇄 : 성문기획 (02)2272-1977
